세종정책연구 2020-04

트럼프 시대 미·중·러 3각 관계와 한국의 대외전략

홍현익 지음

세종연구소

저자 약력

홍현익 (洪鉉翼)

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
현 합동참모본부 정책자문위원
현 경기연구원 이사
현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위원
현 KB금융 자문위원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역임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역임
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회 위원 역임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위원 역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상임위원 역임
세종연구소 안보실장, 외교전략연구실장 역임

【주요 저서 및 논문】
『DMZ 국제평화지대 구상 실현방안』, 『한반도 정세 대전환과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구축방안』,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국의 대외전략』, 『북한의 핵 도발·협상 요인 연구: 사례분석의 함의와 향후 북핵정책 방향』, 『21세기 대한민국의 한반도대전략: 북한문제 해결과 평화 구축 및 통일전략』, "북한의 핵 미사일 대비 안보 태세 구축방안," "대박통일을 위한 대북정책 및 국제 협력방안: 독일과 예멘 사례," "탈냉전기 폴란드와 우크라이나의 대외안보전략 연구: 통일한국에 대한 함의," "미국의 적성국과의 관계 정상화: 중국·베트남·리비아·미얀마 사례와 북·미관계 정상화," "미 오바마 행정부의 동아시아 중시 전략과 한국의 대응전략,"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입과 한국의 준비·대응 방안," "중국의 부상에 따른 러·중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 "미·중·러 3각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동맹," "소비에트 연방체제 붕괴의 원인" 등 다수의 논문 저술.

트럼프 시대 미·중·러 3각 관계와 한국의 대외전략

2020년 10월 30일 발행

지 음 | 홍 현 익
발행인 | 백 학 순
발행처 | 세종연구소
주소 | (우) 13449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51번길 20
전화 | (031) 750-7615
팩스 | (031) 754-0100
홈페이지 | www.sejong.org
등 록 | 2001년 1월 19일 제1-26호
ISBN | 978-89-7429-740-4

※ 본 자료는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세종연구소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차 례

요약문 5

Ⅰ. 들어가는 말 9

Ⅱ.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미·중 갈등 11

1.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전략 기조 11
2.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미·중 갈등 12
3. 미·중 경제전쟁과 미·중 갈등 전망 21

Ⅲ.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 대응 33

1. 안보부문에서의 중·러 공동 대응 33
2. 경제부문에서의 중·러 공동 대응 40

Ⅳ. 미-중·러 갈등과 한반도 43

1. 러시아 및 중국과 한반도 43
2. 북핵문제와 남·북·미·중·러의 복합게임 44
3. 2020년 6월 북한의 도발 평가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전망 51

Ⅴ. 정책 제안 53

1. 포괄적인 대외전략 기조 54
2. 대북정책 59
3. 대미정책 60
4. 대중정책 64
5. 대러정책 66
6. 동아시아정책 67

참고문헌 70

요 약 문

트럼프 행정부는 세계질서를 주도하는 초강대국으로서 모범적으로 국제 공공재를 제공하는 책무를 다하기보다는 자국 이익 우선시정책을 대외정책 기조로 천명하고 대외전략의 큰 틀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고 포위하는 인도·태평양전략을 추진해왔다. 미국은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에게 제재를 가하고 있고, 중국과도 무역 갈등에서부터 시작해 관세 부과, 정치·경제체제 즉 제도 변화 압박을 거쳐 전면적인 무역 전쟁과 경제 전쟁, 무기 경쟁과 안보 및 이념 대립을 포함하는 패권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평가된다.

이에 대해 중국은 먼저 미국과의 군사대결에서는 승리하기 어려우므로 중국 인근에서 미국과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국과의 군사적 긴장과 도발 수위를 적절히 조절해 기득권을 기정사실화(fait accompli)하고 싸우지않고 이기는(不戰勝)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또 러시아와 연례적으로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동맹에 준하는 군사협력 태세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와 중국의 협력은 호혜적이고 상호보완성이 크므로 미국의 대 중·러 공세가 지속되는 한 계속 유지·강화될 것이다. 경제적으로도 미국의 공세에 정면 대립하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져 견제하면서 타협책을 모색하고 내수활성화와 기술 자립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G2간 대립은 구조적으로 중국이 미국의 국력을 맹추격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양측간 갈등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이 있어 계속될 것이지만 중단기적으로는 파국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구조적으로는 세계패권을 둔 세력 경쟁의 측면이 강하므로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단지 현 추세가 지속되면 2030년 이전에 중국이 시장 규모는 물론이

고 경제력(GDP)에서도 미국을 추월할 것이고, 항모전단의 비율도 11:3에서 10년 이내에 11:6 정도로 좁혀질 것이며, 2050년 경에는 군사력에서 미국을 넘볼 가능성도 있다. 에너지와 식량면에서도 중국은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스마트 농법 등 식량 증산에 집중해 열세를 보강하고 있다. 결국 패권경쟁의 성패는 기술과 금융, 매력있는 거버넌스 구축 등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는 미국의 대외전략은 중국 및 러시아뿐 아니라 한·미동맹을 대외전략의 주축으로 삼고 있지만, 중국 및 러시아와의 전략적 동반자적 협력도 유지·발전시키려 하는 한국의 국가전략에도 심각한 도전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미·중 경쟁이 점차 전면적인 대립과 갈등으로 확대되면서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이 당연히 미·중관계에서 미국 편에 서야된다고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 정세를 냉전적 이념대결 상황으로 규정하고 미·중 사이에서 한 나라를 택일해야 한다는 경직된 이념적 진영논리는 넘어서야 한다. 정부는 미국과 중국이 전방위적으로 경쟁하고 있지만 규칙에 기반한 경쟁과 포용적 국제질서와 규범을 중시한다는 점에 착안해 21세기 시대정신에 적합한 외교 원칙과 규범을 내세워 대응해야 한다. 한국의 외교정책 기조로 '국제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전방위적인 협력'을 내세우고 이에 부합될 경우에만 미국의 요청에 능동적으로 응할 수 있을 것임을 선언해야 한다.

한편 미·중이 전방위적인 신냉전 대결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중국이 미국이 원하는 대북 제재에 협력해야할 동기는 약화되고, 오히려 북한과의 전략적인 협력이 중요해지는 구조가 형성되었다. 미·중간 경쟁이 불가피하더라도 일정 수준과 국제적인 규칙에 따라 통제되고 사안에 따라서는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공유되어야 양 강대국들의 협력 속에 북핵문제 해결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러시아와 협력해 미·중 관계가 협력 관계로 재편되도록 갈등 요인을 축소시키고 소통을 도우며 중재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 협상을 중재·촉진하는 한국의 역할은 북한의 체제안전을 보장하는 주변국의 전략적 이해의 균형점을 조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제도화 등을 설득력있게 선도하는 외교적 지혜가 발휘되어야 한다.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먼저 대북 전단 살포를 중단시키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고, 우리가 남북간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모든 사안들을 사전에 미국과 조율하려 한 데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정당하게 스스로 행할 수 있는 부분은 행동한 사후에 미국에 통보해주는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

대미정책에서는 우선 지체되고 있는 한·미 방위비 협상을 조속히 적절하게 마무리지어야 한다. 미국이 계속 주둔비를 내세우면 미국의 국방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있다. 한국의 국방력 향상을 감안하면 주한미군 병력이 과다하게 배치되어 있으므로 2만8천500명 중 1만명 정도는 감축해도 좋다고 제안하는 것이 한·미간의 호혜적인 관계 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북한과 미국의 국력 차가 핵무기 수나 운반수단, 경제력 모두에서 100배 이상 차이가 나고 상호 신뢰가 박약한데 미국이 주장하는 단번의 비핵화는 북한이 전쟁에서 패배하거나 경제적으로 패망할 수 있는 압박을 가할 수 있기 전에는 타결 가능성이 거의 없다. 미국이 진정 북한의 비핵화를 바란다면 점진적이고(incremental) 단계적이며 상호적인 동시 행동을 취하라고 적극 설득해야 한다.

중국은 무역과 투자의 제1 상대국이자 북한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유지 및 평화통일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 발전과 호혜적인 협력을 도모하는 동시에 중국의 초강

대국 부상에 대비하는 낮은 수준의 헤징을 동시 병행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현명하다.

러시아와는 북한을 참여시키려 노력을 지속하면서 양측간의 호혜적인 다양한 경협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매년 가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되는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끝으로 한국 정부가 러시아 등과 협력해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이 공동안보와 협력안보의 기치 하에 태동한다면 역내 지속가능한 평화질서 수립뿐 아니라 21세기 미·중 갈등과 대립 상황의 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이 국제갈등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대외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지만, 동북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도모하는 방향으로는 얼마든지 국제질서를 주도할 수 있을 것이다.

Ⅰ. 들어가는 말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질서를 주도하는 초강대국으로서 모범적으로 국제 공공재를 제공하는 책무를 다하기보다는 자국 이익 우선시정책을 대외정책 기조로 천명하고 대외전략의 큰 틀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고 포위하는 인도·태평양전략을 추진하자 중국과 러시아는 경제는 물론이고 외교·안보 부문에서도 협력해 대응해왔다. 한국도 동맹국 미국의 새로운 요구에 대해 합리적으로 공조·대응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한반도 전략 및 외교·안보전략에 대해서도 적절히 대비해야 한다. 특히 2019년 7월부터 한국의 국가안보 환경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왔다.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고 일본과의 갈등을 겪고 있는데다 미국과의 전략 및 정책 조율도 당면과제로 등장하고 있으며 한국의 평화·협력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마저 한국정부의 정책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를 맞아 재조정이 필요한 한국의 외교·안보정책에 지혜로운 해법 마련이 요구된다.

이에 본고는 먼저 한국의 대외 국가전략의 환경과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미국이 중국의 부상을 포위하고 견제하기 위해 펼치고 있는 인도·태평양전략의 골간을 살펴보고, 이로 인해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방면에서의 미·중 갈등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고 전망하며, 중·러가 동반자로서 협력 대응하는 양상을 분석한다. 또 이러한 환경 속에서 진행되는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 협상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남·북·미·중·러간 게임 양상과 한반도 정세를 분석한 뒤, 비핵화 협상 전개 과정과 미국과 북한의 전략 변화, 미·중, 한·미, 한·중 및 남북관계의 변화 등을 고려하면서 국익 극대화를 위해 한국정부가 취해야 할 바람직한 외교·안보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필자는 2003년에 『9·11테러 이후 미·중·러 3각관계의 변화』(118쪽)를 출간했고, 8년 뒤 2011년 1월에는 "미·중·러 3각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 (70쪽)을, 그리고 2014년 2월에는 "미 오바마 행정부의 동아시아 중시 전략과 한국의 대응전략: 북한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확보를 위한 외교정책 모색"을 출간한 바 있다. 이제 다시 6년 만에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배경으로 한반도에 전개되는 새로운 국제 상황 하에서 특히 미국의 세계전략에 대응하는 중·러 동반자의 대응과 북핵 협상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 안보정세를 한국의 국가전략 상황으로 분석한 뒤, 한국의 국가전략 차원에서 한국의 바람직한 외교·안보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한국의 대외전략에서 한미동맹이 중추 역할을 하고 초강대국인 미국의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크므로 기존 연구들은 주로 인도·태평양전략을 분석하고 한국의 대응방안을 제시한 것들이 대부분이고, 중국이나 러시아의 대응을 감안한 한반도 안보정세와 국가전략을 집중 조명한 연구는 드물다. 본고는 오히려 미국의 전략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공동 대응과 북·미 협상과 남북관계를 중심으로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한국의 국가전략 환경을 종합적으로 재구성하고 그러한 다면적인 전략 환경 구도 하에서 한국의 국가 외교·안보전략을 제시하려 한다.

Ⅱ.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미·중 갈등

1.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전략 기조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는 미·소 냉전시대로 지칭되지만 미국이 압도적인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졌기 때문에 미국 주도의 평화시대(Pax Americana)로 볼 수 있다. 미국은 국제 통화질서를 안정시키기 위해 기축통화를 운영했고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IBRD)을 주도하면서 국제금융을 주도했다. 상당한 교역 적자를 감수하면서 전 세계 국가들의 생산품도 구입해 주었다. 또 강력한 군사력으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경찰 역할도 자임해왔다.

그러나 2017년 1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은 '작은 의미의 국익'을 극대화(America First)하기 위해 빠른 속도로 이러한 역할에서 벗어나고 있다.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탈퇴,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 북미자유무역협상(NAFTA) 재협상, 한·미FTA 재협상, 멕시코 국경지대 장벽 건설, 불법 이민자 추방, 이란 핵 합의 파기, 이스라엘 주재 미 대사관 예루살렘 이전, G7 정상회의 공동선언 거부, WTO 탈퇴 위협, 쿠르드족 보호 회피, 전격적이고 전방위적인 관세 인상 등이 이런 사례들에 속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독재자나 권위주의 지도자들에게 친화력을 보여온 것도 특이하다. 동맹에 대해서도 국제평화와 신뢰 및 국가간 관계보다 상업적 이해타산 관계를 적용하려는 성향을 드러내왔다. 유럽의 NATO 회원국들에게 국방비 증액을 강력히 요구해왔고 한국과 일본에 대해 갑자기 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금의 2배 이상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무리한 요구는 동맹간 신뢰를 훼손하고 결속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트럼프의 미국이 세계질서 주도국의 책임을 경시하고 보호무역주의를 채택하며 일방주의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은 분명하지만 제임스 먼로시대처럼 국제적 고립주의로 회귀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017년 12월 발표한 미 국가안보전략 보고서(National Security Strategy)에서 미국이 '미 본토 방어', '번영 제고'뿐 아니라 '힘을 통한 평화'와 '미국의 영향력 확대'도 국가목표의 4대 축(pillar)으로 제시하고, 국제테러와 함께 중국과 러시아를 가상적국으로 지목하면서 미국이 국제평화를 지키려는 목적으로 맺은 동맹을 미국이 지목한 가상적국들을 포위하고 견제하려는 목적으로 변질시키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미국은 국제적인 고립을 원하지는 않지만 회피하려는 노력을 경시하고 초강대국으로서의 책임을 쉽게 외면하며,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과거 행정부들이 존중해왔던 동맹의 가치도 경시하는 등 어떠한 행동이라도 하겠다는 성향을 가졌다는 점에서 한국의 대외국가전략 수행에서 상당한 도전과 위험을 내포할 수 있다.

2.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미·중 갈등

소련의 해체로 냉전에서 승리한 미국은 곧바로 21세기 전략적 도전자로 중국을 주목하고 중국을 포위·견제하며 자국이 주도해 구축한 국제질서(Pax Americana)에 순응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클린턴 행정부는 봉쇄와 관여를 동시에 추구하는 Congagement (containment + engagement) 기조의 전략을 구사했고, 오바마 행정부는 아·태재균형(rebalancing)정책을 통해 초강대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 군사력의 60%를 아시아에 집중 배치했다(Pivot to Asia).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4월 미국 플로리다 마라라고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날 때만 해도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는 등 미·중관계는

대립국면은 아니었고 일대일로(一帶 一路, 육・해상 실크로드) 구상에 대해서도 별 반감이 없었다.[1] 그런데 동년 10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인도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조하면서 인도-태평양지역이 '약탈적인 경제'에 의해 지배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강한 대중 견제 의지를 드러냈다.[2] 마침내 트럼프가 11월 아시아 순방의 3대 목표 중 하나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 활성화'를 제시했고, 며칠 뒤 미국, 일본, 인도, 호주 등 4개국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Quad(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4국 안보대화) 연합체 활성화를 위한 4개국 국장급 회의를 개최했다.

이러한 정책은 다양한 국가정책보고서를 통해 정립되었고 정책으로 추진되어왔다. 2017년 12월 미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는 전략적 경쟁국 또는 수정주의 국가로 규정한 중국과 러시아의 도전을 물리치고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며, 불량국가로 규정한 이란과 북한을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격퇴할 것(Preserve Peace through Strength)임을 선언했다.

이러한 노선은 2018년 1월 미 국가국방전략(Summary of the National Defense Strategy)와[3] 2019년 6월 1일 미 국방부의 인도-태평양전략보고서에서 미국의 국가전략 기조로 확립되었다.[4] 이 보고서는 미

---

1) 물론 트럼프는 대통령 당선자 시기인 2016년 12월 초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의 전화 통화에서 1972년 이후 미·중관계에서 흔들 수 없는 원칙이 된 '하나의 중국' 원칙을 흔들 수 있음을 시사했고, 2017년 1월 13일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도 "중국의 통화정책이나 무역 불균형문제에서 진전이 없다면 '하나의 중국' 원칙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해 중국 지도부를 긴장시키기도 했지만, 이는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서울신문, 2017년 1월 16일.

2) 권보람, "미 인도-태평양 전략의 지경학과 한국 안보: 요인과 정책적 함의," 『합참』, 제83호, 2020년 봄호(2020년 4월), p. 23.

3) Department of Defense, *Summary of the 2018 National Defense Strategy* (January 2018).

4) Department of Defense, *The U.S., Indo-Pacific Strategy Report: Preparedness, Partnership, and Promoting a Networked Region* (June 1, 2019).

국이 직면한 4대 도전으로 패권을 추구하는 도전자 중국, 부활한 악성 방해자 러시아, 불량국가 북한, 테러·불법무기·해적 같은 초국가범죄를 명시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단기적으로 지역 패권국,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우위국가 지위를 노리는 중국을 인위적으로 기존 질서를 깨는 파괴자로 보고, 이러한 중국을 포위하고 견제하는 것이 미국의 세계전략의 핵심임을 감추지 않았다.[5]

이런 맥락에서 미 국방부는 다국적해군 환태평양훈련(림팩)에 중국의 참가를 초청했다가 2018년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화를 이유로 취소했고, 동년 9월 '항행의 자유' 작전을 수행 중이던 미 구축함 디케이호가 중국이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게이븐 암초(중국명 난쉰자오) 인근에서 중국 구축함 란저우호와 41m까지 근접해 대치하는 등 양국관계는 악화됐다. 더구나 2018년부터 정치적 불신으로 정부간 대화 채널 수백 개가 모두 닫히는 등 양국 소통도 급격히 줄어들었다. 1990년대 중국이 대만 인근 해역에서 연이어 미사일 시험을 하고 2001년 중국 하이난섬 인근에서 미군 정찰기와 중국 전투기가 공중 충돌해 중국군 조종사가 사망하는 등 과거 양측이 갈등했을 때, 소통 채널을 통해 위기 고조를 막았다는 것을 상기하면 이런 상황은 상당히 우려할만 하다고 보인다.[6]

또 미국은 한·일 GSOMIA 체결을 독려했고,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였으며, 한·미간 대규모 연합훈련은 중단한 반면, 미·일 연합훈련은

---

[5] 미 태평양사령관 해리 해리스는 2018년 3월 15일 상원 군사위 연례 기조연설에서 "태평양사령부의 목표는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질서를 강화하기 위해 일본, 한국, 필리핀, 호주 등 다양한 동맹과 파트너들의 믿음직한 안보망을 구축하는 것인데, 중국 포위를 확장하기 위해 궁극적으로 인도를 포함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말했다. Michael Klare, "The Pentagon Is Planning a Three-Front 'long War' Against China and Russia," *Foreign Policy in Focus* (Apr. 4, 2018), pp. 3-4. 2018년 5월 태평양사령부는 인도·태평양사령부로 개칭했다.

[6] 차병섭 특파원, "미·중간 군 포함 수백 개 대화 채널 끊겼다…충돌위험 최고조," 『연합뉴스』, 2020년 6월 24일. 주펑(朱鋒) 난징대 교수는 2017년 이후에는 미국의 인도·태평양사령부와 중국군 간에 회담이 개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Ibid.

2019년에 총 38회, 누적일수로 406일간 훈련을 해 2016년 대비 40% 이상 횟수를 늘렸다.[7] 2019년 4월 말~5월 초에 중·러 양국 해군이 산둥성 칭다오(青島) 앞 서해 수역과 공역에서 연합훈련을 시행하자 미국은 5월 20일 남중국해에 7함대 소속 구축함을 보내 '항행의 자유' 작전을 실시하며 중국을 자극하면서 신경전을 벌였다.

나아가 2019년 8월 2일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구소련과 1987년 12월 사거리 500~5,500km의 미사일 전폐를 약속한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을 탈퇴했다. 미국은 국제사회의 전략적 안정의 한 축을 이루어온 이 조약을 파기하는 명분으로 러시아의 조약 위반을 들고 있지만, 실제로는 INF조약으로 미국과 러시아가 중거리미사일을 개발·배치하지 못하고 있는 동안 중국이 이를 대량 생산해 아시아 주둔 미군이나 중국에 접근하는 미군 함정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8] 그러나 미국이 조약 파기에 더해 중거리탄도미사일을 개발해 유럽과 한국이나 일본, 호주 등 동아시아 지역에 중거리미사일 배치해 중국의 '반접근 지역거부' 전략을 무력화하고 군비경쟁을 압박하려 하고 있으므로 동북아 지역 긴장이 또 한 차례 고조될 것이 우려되는 동시에 미국이 이를 한국에 배치하려할 경우에는 한국의 국가안보에 대한 심각한 도전 요소가 될 것이다.

2019년 11월 4일 중국의 주도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타결돼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행정부가 주도하던 TPP를 포기한 것이 부각되는 가운데 같은 날 미 국무부는 인도-태평양전략

[7] 유용원, "미 네이비실, 주일미군과 특수전 훈련," 『조선일보』, 2020년 7월 3일.

[8] 2021년 2월 5일 효력이 종료될 예정인 New START 조약도 연장이 불확실하다. 2010년 4월 서명된 이 조약은 양국간 남은 유일한 전략핵무기 통제협정으로서 양국이 실전배치 핵탄두를 1천550개 이하로, 이를 운반하는 ICBM, SLBM, 전략폭격기 등 운반체를 700기 이하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년 2월 10일. 미국이 New START 조약마저 폐기하면 국제사회는 수직적 핵확산 및 제한핵전쟁에 대한 우려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이병구, "미국의 INF조약 탈퇴 선언과 동아시아 안보의 미래," 『국방연구』, 62-2 (2019년 6월), pp. 45-46.

이행보고서를 공개했다. 미국은 항상 인도-태평양 국가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며,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은 무역과 교류, 공동의 희생, 상호 이익을 펼치면서 관여해왔다고 주장했다. 다자적으로 또 인도와의 동반자관계 강화 등 양자적 동반자 관계를 맺어왔고, 자유, 공정, 상호주의적 교역을 통해 인프라 구축, 에너지, 디지털 경제 등 경제 번영을 증진했으며 좋은 통치제도를 구축하려 앞장서 왔을 뿐 아니라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고 인적 자본 양산에 투자해왔다고 강조했다.[9]

미 백악관은 2020년 5월 21일 의회에 제출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접근' 보고서를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해 협력보다는 공개 압박과 사실상의 중국 봉쇄전략 등의 '경쟁적 접근(competitive approach)'을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사실상 양국 간 '신냉전'을 선포했다고 평가된다.[10] 보고서는 먼저 1979년 미·중 수교 이후 40년간 특히 중국이 2001년 WTO에 가입한 지 19년간 미국은 중국이 발전하면 근본적인 정치적·경제적 개방과 국내 경제 개혁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건설적이고 책임있는 당사자와 열린 사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지원했는데, 그 결과는 중국공산당이 자유롭고 열린 규범 기반 질서를 악용하고 자국에게 유리하도록 국제체제를 변형하도록 도모하면서 국가주도 보호주의 정책을 통해 미국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해를 끼치고 세계 시장을 왜곡하며 국제 규범을 침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환경을 저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11] 또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이 중국의 세계적인 이익과 비전 및 국내 경제적 필요를 증진하기 위해 국제적인 규범, 기준, 연결망을 변형시키려는 목적을 가진 것으로, 중국 당국이 이를 악용해 부

9) Department of State, *A Free and Open Indo-Pacific Advancing a Shared Vision* (November 2019).

10) 이성현, "미·중 신냉전의 시작인가?, 『세종논평』, 2020-09 (세종연구소, 2020.05.27) & 동아일보, 2020년 5월 23일.

11) The White House, *United States Strategic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May 2020), pp. 1-2.

적절한 정치적 영향력과 군사적인 접근을 얻어내는 대표적인 약탈적 경제정책이라 평가한다.[12]

중국은 호주, 캐나다, 한국, 일본, 노르웨이, 필리핀, 몽골 같은 나라들에게 무역과 관광을 규제하면서 피해를 주었다고 지적하면서 역내 동맹들과 파트너들에게 "중국의 위협에 맞서기 위한 역량 개발과 안보 지원에 참가하도록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도·태평양 내 가치를 공유한 나라들과 계속해서 자유로운 기업 활동과 민주적 통치를 보장하기 위한 역할을 확대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13] 결론적으로 원칙에 입각한 현실주의의 관점에서 미국은 중국공산당의 도전에 대해 미·중이 장기적인 경쟁 상황에 있음을 인지하고 미국의 국익을 적절히 지키는 것으로 대응할 것임을 선언하고 있다.[14] 미국의 동맹국이자 중국과 인접한 대중 전략의 요충지에 위치한 한국으로서는 미국의 대중국 견제 참여 촉구는 향후 미·중 사이에 미국 선택을 강요하는 정책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고 우려할 수밖에 없다.

한편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인공섬을 건설하고 베트남, 필리핀 등과 영유권 갈등을 벌이고 있으므로, 미국은 군함을 동원해 '자유의 항해' 작전을 지속적으로 펼쳐 중국에게 남중국해가 계속 공해임을 인지시키는 한편 하와이와 괌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 태평양 산호섬 웨이크섬

---

[12] op.cit, pp. 3-4 & 6-7. 반면에 러시아는 일대일로 사업이 중국이 경제적·재정적 능력을 활용해 국제사회에 관여해 세계적인 영향력을 갖는 강대국으로 부상하려는 것임을 인지하면서도 양국간의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입각해 러시아의 전략적 이익을 증진하는 경제적 기회로 활용하려 한다. 단지 러시아의 대외전략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중앙아시아에서의 우월한 군사 강국으로서의 지위 유지 등에 변화를 주지 않는 한도에서 이 사업을 지지하고 협력하려 하고 있다. Feng Yujun et al., "The Belt and Road Initiatives: Views from Washington, Moscow, and Beijing," *Papers*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Apr. 8, 2019), pp. 13-14.

[13] 『뉴시스』, 2020년 5월 22일. 미국이 대중 견제를 위해 협력하려는 대상은 아세안의 인도-태평양 전망(Outlook),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비전, 인도의 지역 모든 국가를 위한 안보와 성장정책, 호주의 인도-태평양 개념, 한국과 대만의 신남방정책 등이다. The White House, op. cit., p. 2.

[14] The White House, p. 7 & p. 16.

에 2020년 초부터 활주로 확장공사를 진행해 완전무장한 B-52 전략 폭격기를 배치할 수 있는 군사기지로 만들어 대중 공격 전초기지화하고 있다.[15] 남중국해에서 세력을 확장하려는 중국과 이 지역을 공해로 유지하려는 미국은 결국 이 지역에서 동시에 군사훈련을 실시하기도 했다. 2020년 7월 초 중국 해군이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 (중국명 시사 군도, 베트남명 호앙사 군도) 해상에서 군사훈련을 하자, 미군이 니미츠 항공모함과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을 급파해 인근에서 맞대응 훈련을 한 것이다.[16]

미 의회도 상하원 모두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심의하면서 초당적으로 수십억 달러를 배정해 대중 압박에 쓰도록 했다. 상하원이 각자의 국방수권법을 통과시키고 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만들 때 대중 압박에 막대한 예산을 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17] 이에 호응하듯이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7월 7일 취임 1주년 메시지에서 중국전략관리단을 신설했고, 미 국방대학 교육과정의 50%를 중국과 관련한 수업으로 바꾸며 중국을 '지속적인 위협(pacing threat)'으로 다루는 등 중국에 초점을 맞추라고 지시했다. 이런 가운데 7월 6일부터 3일 연속으로 미군 정찰기가 중국 영해 기준 100km 내외까지 접근했다.[18] 7월 21일 미국은 휴스턴 주재 중국총영사관 폐쇄를 통보했고, 이틀 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캘리포니아주 리처드 닉슨 대통령 기념도서관에서

15) 『조선일보』, 2020년 7월 8일. 웨이크 섬은 하와이에서 3,700km, 괌으로부터 2,430km 떨어진 반면, 중국본토에서는 5,000km 떨어져 중국의 중·단거리 미사일 타격 사정권에서 벗어나 있어 괌과 하와이 미군 기지 피침에 대비해 위험 분산이 가능하면서 태평양 제해권 장악의 핵심 요충지가 될 수 있다.

16) 『조선일보』, 2020년 7월 6일. 과거 베트남이 파라셀군도의 서쪽군도를 차지하고 중국이 동쪽군도를 점유하고 있었는데, 주변 바다에 묻혀 있는 해양 자원의 가치가 알려지면서 1974년 중국이 서쪽군도를 무력으로 차지해 현재까지 점거하면서 인근에 원유 시추 시설을 설치하고 군사훈련을 하며 중국의 영토라고 주장해왔다. 『조선일보』, 2020년 7월 14일.

17) 『조선일보』, 2020년 7월 4일.

18) 『조선일보』, 2020년 7월 10일.

행한 연설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실패한 전체주의 신봉자”라고 비난하고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우리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 우리 시대의 임무”라며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 폐쇄 조치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한 중국의 대응조치에 따라 27일 미국도 청두 총영사관에서 철수했다.

8월 초 양국 국방장관이 90분간의 전화통화에서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에서의 우발적인 충돌을 피하자는 데 합의했지만, 중국이 서해(중국명 황해),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잇따라 군사훈련을 하자, 미국은 정찰기를 수차례 띄웠고 서해·보하이만을 관할하는 중국 북부군구가 군사훈련을 위해 설정한 비행금지 구역에 고고도정찰기 U-2를 보냈다. 중국군이 동월 26일 베트남과 영유권 갈등을 벌이는 파라셀군도(중국명 시사군도)와 하이난다오(海南島) 사이 해역을 향해 항모킬러 둥펑(東風: DF)-26B, DF-21D 등 지상발사탄도미사일 뿐 아니라 사거리 1만 1,000km의 SLBM 쥐랑(巨浪: JL)-2A를 발사해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자, 미국은 다음 날 대만해협에 P-8A 초계기를, 파라셀군도에는 구축함을 보내 응수했다.[19]

중국 연안에서 미국의 해양 압박을 받고 있는 중국은 인도양을 중심으로 해군기지들을 건설하면서 대양해군의 꿈을 키우는 진주목걸이 전략을 펼치고 있다. 우방국 파키스탄의 과다르항을 2015년부터 43년간 임차하고 중국 해상무역 보호 명목으로 군함을 배치했으며, 2019년 아프리카 지부티에 확보한 중국 인민해방군 기지에 항공모함 정박이 가능한 군항 건설에 착수했다. 또 일대일로 사업을 활용하면서 스리랑카, 몰디브, 캄보디아, 파키스탄 등에도 군 기지 건설을 모색 중이다. 또 현재 중국은 러시아제 랴오닝호와 구 소련 기술로 자체 건조한 산둥호 등 2개 항공모함을 운용하고 있는데 이어 세 번째 항모를 자체

19) 『조선일보』, 2020년 8월 29일.

기술로 상하이 장안조선소에서 건조해 늦어도 2021년 초까지 진수할 예정이다.[20] 또 장난조선소에서 네 번째 항공모함도 용골 설치작업이 진행되는 등 본격적인 건조에 들어갔다. 그러나 미국처럼 원자력 추진 장치는 다롄에서 건조될 것으로 보이는 다섯째 항모부터 적용될 것으로 여겨진다.[21]

한편 중국은 2020년 6월 23일 마지막 베이더우 위성을 실은 로켓 발사에 성공해 베이더우(北斗) 위성항법 시스템을 완성해 미국 위성항법 시스템인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에서 독립, 자체 위성을 통해 휴대전화, 무인자동차, 미사일 등에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22]

이처럼 중국은 2035년까지 군을 현대화하며 2049년까지는 세계 일류 군대를 건설하는 계획을 세우고, '중국 특색의 강군의 길'을 가기 위해 '적극적 방어'에 기반을 둔 군사전략을 채택하여[23] 2개 도련선을 차단선으로 설정하고 그 하위 군사전략으로 A2/AD(Anti-Access/Area Denial: 반접근/지역거부)를 추구하고 있지만,[24] 미국이 비대칭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군사부문에서는 상당 기간 직접적인 군사충돌이나 대항을 회피하는 화평발전 원칙을 지킬 것이다.[25] 즉 미국과

[20] 이 세번째 항공모함은 기존 항모보다 더 크고 미국 신형 제럴드 포드급 핵항모보다 넓으며 기존의 증기식 사출기가 아닌 전자기식 사출기(catapult)가 부착돼 짧은 시간에 더 많은 항공기를 또 더 무거운 비행기를 띄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2020년 9월 14일; 『한국경제』, 2020년 9월 15일; 매일경제, 2020년 7월 18일; 『한중21』, 2020년 7월 2일; 『위키백과』.

[21] 『매일경제』, 2020년 7월 18일.

[22] 이 위성 발사로 중국은 미국(GPS), 러시아(글로나스), 유럽연합(갈릴레오)에 이어 4번째 자체 위성항법 시스템을 갖춘 국가가 됐다. 『연합뉴스』, 2020년 6월 23일; 박수찬, 『조선일보』, 2020년 6월 24일.

[23] 이러한 중국의 '신시대 적극방어 군사전략'에 대해서는 정재흥, "미·중간 군사안보적 갈등과 중국군의 대응동향," 2020년 제15차 정세토론회 (세종연구소, 2020년 10월 6일), pp. 14-16 참조.

[24] 김태현, "트럼프 시대 미국의 대중국 군사전략: '경쟁전략'과 '비용부과'," 『국가전략』, 26-2 (2020년 여름호), pp. 44-46.

[25] 하영선, 전재성 "인도·태평양을 둘러싼 미·중의 포석 전개와 한국의 4대 미래 과제,"

의 군사대결에서 승리하기 어려우므로 중국 인근에서 미국과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국과의 군사적 긴장과 도발 수위를 적절히 조절해 기득권을 기정사실화(fait accompli)하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不戰勝)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26]

3. 미·중 경제전쟁과 미·중 갈등 전망

현 국제정치의 주 전선은 냉전적 미·중 갈등이다. 세계 2차대전 이후 전승국이었던 미국과 소련 간에도 냉전이 있었다. 그러나 소련은 상호 공멸할 수 있는 전략적 핵능력에서는 미국과 자웅을 겨루었지만 경제면에서는 큰 격차를 보였고 그 결과 냉전 종식 시 무력함을 보였다. 반면에 중국은 군사안보는 물론이고 인구는 미국의 네 배 이상이며 경제면에서도 머지않아 미국을 능가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미국은 그야말로 더 강력하고 더 야심찬 도전자를 상대해야 한다.[27]

미·중간에 경제 전쟁을 촉발한 배경은 구조적으로는 중국이 지속적인 고성장을 통해 미국의 경제력을 추격하는 가운데 미국의 천문학적인 대중 무역 적자가 계속 증가하는 데 있다. 특히 미국이 경계하는 자세를 적극적인 공세로 전환한 것은 2007년 말 뉴욕발 금융위기가 발발한 가운데 베이징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른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한 데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은 장기 집권 환경과 구도를 조성하기 위해 미국과의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28] 시진핑 주석이 덩샤오핑의 유언인 도광

EAI 특별기획논평 시리즈 (2019년 6월 5일), p. 5.

[26] 정재흥 (2020년 10월 6일), p. 8.

[27] Elbridge A. Colby, "The Age of Great-Power Competition," *Foreign Affairs*, 99-1 (Jan./Feb. 2020), p. 2.

[28] 시진핑의 권력 집중 의지는 덩샤오핑이 개혁·개방 정책을 채택하고 이에 부합하는 권력 구도를 정립하기 위해 세운 몇 가지 원칙을 경시하는 데서 잘 드러난다. 그 원칙들은 최고간부직에 대한 연령 한도 도입(七上八下), 파벌(태자당, 공청단, 상하이방) 형성과

양회에서 벗어나기 시작해 오바마 대통령과의 2013년 6월 캘리포니아 미·중 정상회담에서부터 신형대국관계를 적극적으로 주창하기 시작한 것이다. 더구나 중국은 2015년 5월 '중국제조 2025'를 제창해 미국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중국의 구상은 2025년까지 핵심부품과 재료의 70% 국산화를 달성해 원천기술과 재료의 해외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것이지만,[29] 뉴욕타임지 기고가 프리드먼이 경고했듯이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은 로봇 산업, 자율주행차, 전기차, 인공지능(AI), 바이오기술, 우주산업 등에서 2025년에 미국을 추월하겠다고 야심차게 나선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30]

이런 맥락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주창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패권 경쟁 차원에서 대중 공세를 전개한 것이다. 그는 대중 경제전쟁으로부터 시작했다. 먼저 막대한 대중 무역적자 감축을 명분으로 2018년 7월 1차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 9월까지 세 차례, 그리고 2019년 5월 관세를 추가로 인상했고 8월에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공식 지정했다. 나아가 중국의 문제는 체계(system) 차원이라는 인식으로 전환해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불식한다는 구호를 걸고 보조금, 덤핑, 기술 절취, 지적재산권, 화웨이 등 공산당 지배기업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이들을 개선하라고 요구하는 경제 체제 변화를 압박하고 있다.[31] 중국의 팽창이 미국에게 모든 면에서 위협이라는 인식으로 발

상호 견제, 그리고 최고 권력 승계 원칙으로서의 격세지정(隔世指定) 등이다. 김기수, 『중국 경제발전의 정치적 제약: 권력집중의 경제적 역효과에 대한 역사적 고찰』, 세종정책연구, 2020-01 (2020년 8월 28일), pp. 18-21; 김기수, 『홍콩사태의 본질 : 중국 경제·정치 가치관의 충돌』, 세종정책브리프, 2019-14 (2019년 11월 25일), p. 6.

29) 여유경, "'중국제조 2025'의 본질 : 중국 정치경제의 복잡성과 한국에 주는 함의," 『KIMS Periscope』, 제 175호 (2019년 11월 1일).

30) Thomas L. Friedman, "The U.S. and China Are Finally Having It Out," New York Times, May 1, 2018. KOTRA 베이징 무역관이 재정리한 바에 따르면 그 외에 정보기술, 신소재, 첨단선박, 선진 궤도교통설비, 전력, 농업 등의 산업도 이에 속한다. 김성애, "중국 산업 개관," (중국 베이징무역관, 2019.08.09).

31)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창업자 런정페이 회장의 주식 지분은 1.4%에 불과한 반

전해 패권 경쟁 차원으로 진입하고 있는 양상이다. 즉 무역·경제를 넘어 정치·군사부문까지 전방위로 경쟁이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경제 부문에서 트럼프가 노리는 것은 무역, 금융, 환율부문을 문제 삼으면서 제조업의 탈중국화, 자본 유출을 유도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어쨌든 2020년 1월 미·중 양국은 경제전쟁을 잠시 완화하는 1단계 경제무역협정을 체결했다. 백악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의 여러가지 오랜 우려를 시정하고 구조 개혁을 하며 경제 무역 체제에서 변화를 가져오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중국에서 사업하는 외국 기업들에게 기술 이전을 강요하지 않고 지적 재산권 보장을 강화하며 정책 장벽을 시정해 농업과 금융에서 새로운 시장 기회를 창출할 뿐 아니라 오랜 불공정한 환율 관행을 시정하기로 했다고 한다.[32] 특히 중국은 미국과의 정면 대결은 회피하면서 최고 목표로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의 성향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러스트 벨트와 함께 재선에 관건이 되는 유동적인 투표성향을 보이는 농업지역주(Farm Belt)들이 생산물의 상당량을 중국에 수출하는 것에 착안해 이들의 밀, 대두 및 돼지고기 수입을 조절하면서 미국의 대중 공세의 수위와 완급 조절을 시도하고 있다. 대선까지는 위안화 환율도 트럼프가 바라는 적정선을 유지해 주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중국은 일대일로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2019년 11월 4일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총 15국을 아우르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주도적으로 체결해[33] 다자적 자유무역을 선도하고 있다.

면, 노동조합인 공회가 98.6%를 보유하고 있는 점을 들어 미국 정부는 화웨이도 민영기업이라는 외형과 달리 사실상 국유기업 또는 공산당 지배 하 기업이라고 간주하고 있다. 김기수, 『미·중 무역협상 결렬의 전략적 의미』, 세종정책브리프, 2019-08 (2019년 7월 23일), pp. 11-12.

32) The White House, *United States Strategic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May 2020), p. 12.

33)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월 취임 사흘만에 오바마 대통령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탈퇴를 선언했고, 11월 동아시아정상회의도 불참하는

미·중 양국간 패권경쟁에서 핵심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지만 숨어있는 그림 중 하나는 바로 기축통화를 둘러싼 전략경쟁이다. 물론 2020년 달러화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미 연준이 단기간에 4조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해 통화의 신뢰성을 훼손한 데 있다.[34] 또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국 위안화의 위상은 아직 미국 달러와 비교되기도 어려울 정도로 약하다. 2019년 기준으로 국제 외환시장에서 달러 거래비중이 200% 기준에서 88%인데 비해 유로화가 32%, 위안화는 4.3%에 불과하다.[35] 2019년 기준 결제통화로서 위안화 비중은 전체의 1.8%인데 비해 달러는 39.6%이고 유로화가 34.1%이다.[36]

이런 맥락에서 페트로달러도 흔들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020년 1월 3일 미국이 이란혁명수비대사령관 솔레이마니를 드론으로 살해한 것도 그가 중동지역에서 이란의 영향력을 확장하고 사우디 및 쿠웨이트, 이라크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앞장서왔을 뿐 아니라 중국에 수출한 석유 대금을 달러가 아닌 위안화로 결제하고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을 도와 중동에 새로운 질서와 재건을 모색했기 때문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한다.[37] 특히 중국은 2018년 3월 세계 세 번째로

등 다자외교를 등한시했다. 그런 상황에서 RCEP 타결 소식이 ASEAN관련 정상회의 중 들려오자, 미 국무부는 부랴부랴 당일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 관여를 최우선 사안으로 간주한다"고 강조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선일보』, 2019년 11월 6일.

34) 이용욱, "미·중 국제 기축통화 전략경쟁과 한국의 대응," *EAI Special Report* (2020년 8월), p. 3.

35) 이용욱, p. 2 & 조선일보, 2020년 8월 20일; 연합뉴스, 2019년 9월 17일. 또 국제통화기금(IMF)이 집계한 2019년 1분기 외환보유고 통화구성(COFER)을 보면 달러의 비중은 61.8%로 나타났다. 이는 유로화 20.2%, 엔화 5.3%, 파운드화 4.5%, 위안화 2% 등을 크게 뛰어넘는 수치다. 『연합뉴스』, 2019년 9월 29일.

36) 김덕식, 매일경제, 2019년 1월 1일.

37) 전재우, "에너지 안보를 중심으로 본 중국의 지경학 전략과 시사점," 『합참』, 제83호, 2020년 봄호(2020년 4월), pp. 29-30. 이란, 이라크는 각각의 석유 최대수입국인 중국의 페트로 위안을 가동한지 오래이고, 러시아와 천연가스나 무기를 거래하는 나라들은 루블을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인도와 이란 사이의 무역 결제는 인도 화폐 루피가 활용된다. Ibid.

상하이에 원유선물시장(INE: The Shanghai Internetional Energy Exchange)을 출범시킨 데 이어 2020년 7월 세계적인 정유회사 BP와 400만 배럴에 달하는 두 차례의 이라크 경질유 중국 인도에 위안화로 결제했으며 스위스의 머큐리아 역시 UAE 원유 200만 배럴을 위안화로 선물계약했다.[38] 또 미국이 이미 1971년 8월 금태환을 중지하고도 세계 기축통화의 특혜를 누려온 상황에서, 중국은 미국이 경제 위기 상황마다 달러를 남발해 그 가치가 떨어지자 100년만에 기축통화의 자리를 되찾으려는 유럽국가들의 열망을 활용해 원유 수입 등에서 유로화를 사용함으로써 미국을 견제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2020년 6월 30일 미국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홍콩보안법을 통과시켰으며 미국은 홍콩에 대한 특혜 조치를 박탈하는 등 보복에 나서고 있는데다 중국에서부터 발생한 코로나 19 전염병이 미국 내에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어 미국 국민들의 반중 감정이 고조되고 미 의회 내 여야 모두 대중 강경책에 공감하고 있으므로 트럼프의 중국 때리기는 지속되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외교정책의 최고위 3인방인 양제츠 정치국위원, 왕이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추이톈카이 주미대사가 나서 중국 입장을 적극 변호하고 해외 순방을 통해 우군 확보 경쟁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개선할 점을 언급하기보다 미국의 요구가 중국의 공산당 독재 자체를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요구가 과도하고 실패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미국 스스로가 정상궤도로 복귀할 것을 호소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39]

---

[38] 이용욱, p. 3.

[39] 이성현, "악화되는 미·중관계와 향후 중국의 대미정책 변화 전망," 『정세와 정책』 (세종연구소, 2020년 9월호) 참조. 2020년 8월 7일 양제츠가 신화통신사에 게재한 글은 중국의 입장을 잘 보여준다. 1970년대 초 미·중이 체제가 다름에도 이를 인정하고 이익 공유 관점에서 관계를 정상화했고, 그간 교역이 200배나 늘어 호혜적으로 이익을 보았는데, 왜 갑자기 양국 관계에 이의를 제기하고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게 되었는지 의문이라면서 중국 인민의 발전권을 막으려 시도한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므로 중국의 핵심 이익을 존중하고 관계를 다시 정상화하자는 것이다. Ibid.

어쨌든 2020년 11월 미 대선 이전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이유로 미·중 갈등이 일정 한도 내에서 통제될 것으로 보인다.

첫째, 트럼프가 인기 만회를 위해 중국을 때리고 있지만, 중국의 버티기 전략과 미래구상이 매우 구체적이고 중국이 이미 장기전의 대응 전략을 짜놓았으며 장기적으로 시간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할 뿐 아니라[40] 시진핑 주석이 자신의 권력 연장과 관련된 이 문제에서 끝까지 미국의 압력에 버틸 것임을 알고 있을 것이다.

둘째, 미·중관계가 파국을 맞으면 미 증시가 폭락하고 이는 트럼프의 지지 하락을 유발할 것이 분명하므로 트럼프는 미 증시의 상승 기조 유지를 위해서라도 대중 공세를 일정 수준에서 자제할 개연성이 크다.

셋째, 트럼프가 대선 경쟁자인 조 바이든 전부통령에게 지지도가 상당히 뒤지고 있으므로, 재선되기 위해서는 전술했듯이 부동층이 많은 경합주인 스윙 스테이트(Swing States) 중 러스트 벨트와 함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중서부 농업산지인 팜 벨트에서 승리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들의 지지는 주 생산물인 대두, 밀, 옥수수, 돼지고기 등의 대중 수출이 증진되느냐에 좌우된다. 즉 트럼프의 재선은 중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매우 어려우므로 트럼프는 일정 수준에서 중국과 타협할 가능성이 크다. 6월 16~17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이 하와이 회담에서 1단계 무역합의 이행을 재확인한 뒤, 중국은 대두뿐 아니라 옥수수, 에탄올까지 여타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늘릴 것이라면서 트럼프의 대중 공격에 맞서고 있다. 중국 당국이 중국과의 거래에서 거액을 벌은 바이든 차남의 내막을 대미 카드로 쓸 가능성도 있다.

넷째, 미국이 대중 제재를 가하면 중국도 상응한 제재로 맞설 수 있다. 미국이 2020년 7월 11일 중국 내 소수민족인 위구르족을 탄압한

40) 이성현, "미·중 관계의 미래와 한국의 선택," 『외교』, 제130호 (2019년 7월), p. 125-126.

다는 이유로 신장 위구르 자치구 전현직 고위 관리 4명을 제재했는데, 이중 시진핑 주석의 측근이자 공산당 중앙정치국위원 25명 중 1명인 천취안궈(陳全國) 당서기도 들어있다. 이에 중국도 맞대응 조치로 이틀 뒤 샘 브라운백 국제 종교자유담당대사와 미 의회에서 중국, 이란, 북한에 가장 비판적인 마크 루비오·테드 크루즈 상원의원,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의 중국 입국을 금지하는 제재를 발표했다.[41] 미국이 화웨이, 틱톡(Tik Tok),[42] SMIC[43] 등 중국 기업에 부당행위를 가하면, 중국 역시 매출의 20%를 중국에서 얻는 애플뿐 아니라 보잉, 인텔, 퀄컴, 나이키, 3M, GM 등 미국 기업들에게 불이익을 주면서 보복할 수 있다. 중국은 홍콩 내 친미세력을 박해할 수도 있다.

다섯째, 미국의 중국 때리기가 적정선을 넘을 경우 시진핑 주석은 극단적인 정책 수단으로 재정적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미국 국채를 매도하고, 전술했듯이 원유, 가스 등 주요 수입품의 결제를 위안화로 하거나 달러와 경쟁하는 유로화로 바꿔 달러 기축통화제도를 흔들 수 있다. 미국 경제 패권을 흔드는 최강수를 쓸 수도 있는 것이다. 중국은 2020년 상반기에만 1천 60억 달러 상당의 미 국채를 처분하는 등 최근 몇 년 사이 미 국채 보유를 계속 줄여와 2020년 6월말 중국이 보유한 미 국채는 1조 744억 달러로 일본에 이어 세계 2위이다. 미·중 갈등 고조

41) 『조선일보』, 2020년 7월 11일과 14일.

42)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2020년 7월 8일 중국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 등 중국 소셜미디어를 미국에서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는 "국가안보에 관한 문제"이며 "중국공산당이 미국 국민의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거부하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2020년 7월 10일. 강력한 제재 위협을 받은 틱톡에 대해 미국 기업들이 인수 경쟁을 벌였는데, 중국 정부가 개입하고 미 법원이 행정부의 다운로드 금지 결정에 제동을 건데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아 '강제' 매각 협상은 연기되었다. 차대운 기자, 『연합뉴스』, 2020년 9월 25일 & 10월 4일.

43) 미국 상무부는 2020년 9월 25일 자국 반도체 기술과 설비 업체들에 공문을 보내 파운드리(위탁생산) 전문 중국 최대 반도체기업으로 세계 5위인 SMIC(Semiconductor Manufacturing International Corporation)에 대한 수출은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통보했다. 이는 3단계까지 진행된 화웨이 제재 과정 중 1단계와 유사한 과정이 시작된 것을 의미한다. 『한겨레』, 2020년 9월 29일.

와 미국 정부의 재정적자 증가에 대응해 미 국채 추가 매도를 대미 견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44]

종합해 보면 트럼프의 중국 때리기는 미 대선까지 홍보효과를 위해 요란할 것이고 중국은 정면 대응은 자제하겠지만, 미·중 갈등은 적어도 미 대선까지는 일정 수준 내에서 통제되면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단지 패권 경쟁 차원에서의 양국간 경쟁은 양국 내에 큰 변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최소 20년 이상 중장기적으로 계속 진행될 것이다.

이러한 미·중간의 패권 경쟁은 어떻게 전개될 것이고 우리는 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2010년 미어샤이머 교수가 중국은 화평굴기할 수 없고 미국에 도전할 것이라고 강조한 뒤,[45] 앨리슨 교수가 펠로포네소스 전쟁의 역사를 빌어 당시 패권국인 스파르타가 신흥 도전국 아테네의 부흥에 두려움을 느껴 결국 전쟁을 일으켰다면, 현재 미국은 중국과 전쟁을 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피해야 한다고 역설한데서[46] 이 질문은 현재 국제정치학에서 가장 큰 담론이 된 상황이다.

이런 맥락에서 앨리슨 교수가 12개 요인을 가지고 패권국과 도전국 간 갈등의 가능성을 축소시키는 방안을 연구했다면, 후속 연구로 조지타운대의 매스트로 교수는 도전국의 불만, 경제적 상호의존, 제도적 제약, 국내정치체제, 동맹의 성격, 핵무기, 국내 경제성장의 지속가능성 등 7개 변수로 미·중관계의 미래를 들여다 본 뒤 상대적으로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미·중간에 경제적 상호의존이 상당히 진행되어있고

---

44) 『연합뉴스』, 2020년 9월 5일; 동아일보, 2020년 9월 9일. 2020년 9월 5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시쥔양(奚君羊) 상하이 재경대학 교수를 인용해 "중국은 정상적인 상황에서 미 국채 보유를 점진적으로 8천억 달러(약 951조원) 수준으로 낮출 것"이고 "미국이 중국·홍콩을 달러화 결제 시스템에서 배제하는 등의 금융 제재를 가할 경우 미 국채 보유를 대폭 줄일 수" 있으며 "군사적 충돌 같은 극단적 상황에서는 전량 매도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다. Ibid.

45) John Mearsheimer, "The gathering storm: China's challenge to US power in Asia," *The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 3-4 (2010), pp. 381-396.

46) Graham Allison, *Destined for war: Can America and China escape Thucydides's trap* (N.Y.: Houghton Mifflin Harcourt, 2017).

미국의 동맹국들에 대한 안보 보장이 조건부라는 점은 미·중간 전쟁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게 되지만, 국내정치체계와 도전국 중국의 불만을 보면 평화 정착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47] 특히 중국과의 평화가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우선사항이라면, 미국은 중국과의 경제적 상호의존과 국제제도의 역량 강화를 키워야 하는데, 불행하게도 트럼프 대통령은 반대되는 접근법을 취해 국제 제도를 경시하고 상호의존을 줄이며 중국 경제성장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48]

역사적으로 로마, 해지지 않는 나라 대영제국, 나폴레옹의 프랑스 등 세계 질서를 주도한 패권국들은 하나같이 개방적이고 보편적인 이념을 추구했다. 2차 대전 이후 미국도 기축통화를 운영하고 국제사회의 안정을 보장해왔으며 무역 적자를 보면서도 자유무역을 수호해오는 등 이전 패권국들의 전례를 따르는 초강대국의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부시 대통령 때 네오콘적 흑백논리로 반테러전쟁을 독주하다 2008년 국제금융 위기를 맞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미국 제일주의'와 예외주의, 그리고 보호무역을 남발하는 모습은 스스로 질서 주도권을 방기하는 듯한 모습이라고 여겨진다. 반면에 중국은 주동작위(主動作爲, 2013: 해야할 일을 주도적으로 한다)를 넘어 분발유위(奮發有爲, 2014: 떨쳐일어나 해야할 일을 한다)라는 공세적인 대외전략을 표방하고 신형대국관계를 내세워 사활적인 국익 수호 의지를 표명하며

47) 싱가포르 리셴룽 총리는 미국이 중국의 부상을 봉쇄하려 한다면 대립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미국은 체제 복원력과 전세계에서 인재들을 끌어들이는 매력 등 힘을 갖고 있고, 중국 경제도 엄청난 동력과 점점 더 선진화되는 기술을 갖고 있으므로, 이 대립은 소련처럼 한 측의 평화로운 붕괴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예측한다. Hsien Loong Lee, "The Endangered Asian Century: America, China, and the Perils of Confrontation," *Foreign Affairs* (July/Aug. 2020), p. 7/18.

48) Oriana Skylar Mastro (2019), "In the Shadow of the Thucydides Trap: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nd the Prospects for Peace in U.S.-China Relations," *Journal of Chinese Political Science*, Vol. 24, p. 39.

강군몽, 기술굴기,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강대국 건설 등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지만, 미국이 주도해온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수호하고 증진하는 세력임을 홍보하고 실천하려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49]

어쨌든 미국이 세계질서 주도력을 행사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미국이 중국과 비교할 때 향후에도 계속 국력의 우위를 가져야 이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상대적인 국력의 미래 전망도 매우 중요하다. 이에 관해 하영선 교수는 경제, 군사, 기술, 에너지 등 미·중경쟁의 네 전선을 제시하면서 미·중 패권경쟁의 미래를 전망했다. 먼저 GDP를 중심으로 본 경제력에서는 4 대 3(20조 달러 대 15조 달러)으로 미국이 우세하므로 다양한 현안에 대해 적정 수준에서 주고받는 타협이 불가피할 것이다. 해외에 대규모 군사력 투사를 상시적으로 가능하게 해주는 항모전단 수도 11대 2로 미국이 우세하고 국방비도 7 대 2로 미국이 많으므로 2050년까지 미국의 군사력이 우세할 것이므로 중국이 미국과의 정면 대결을 회피할 것이다.[50]

미국이 1980년대에 일본을 10년간의 경제전쟁을 통해 좌초시켰는데, 그 방법은 엄청난 대미 무역 흑자를 주면서 엔화를 10년간 69%나 절상시키고 3차에 걸친 반도체협정을 진행하면서 일본의 반도체산업을 잡은 게 결정적이었다. 이처럼 기술과 금융이 패권경쟁을 좌우할 수 있고 현재 미국도 중국과 통상 전쟁을 벌이는 것 같지만 이 부문에서는 중국을 이기기 어렵고, 결국 기술과 금융 부문에서 중국을 제압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51] 기술부문의 현황을 살펴보면, 상용화는 중국이 미

---

49) 전재성, "트럼프 정부 미국 외교정책의 현황과 미국의 미래," EAI 워킹페이퍼 (2019년 12월 5일), pp. 7-8.

50) 하영선 교수 대담, "미·중 경제 19 대 14…한 쪽이 100% 완승 못해 타협 불가피," 『중앙선데이』, 2019년 6월 22일 & 하영선 · 신기욱 대담, "미·중 GDP 격차 좁혀져 세계질서 재편 예고… K방역 성공 자만 말아야" 『한국일보』, 2020년 5월 25일. 단 중국은 계속 항모 건조에 박차를 가할 것이고 미국은 막대한 유지비가 들기 때문에 항모 건조 경쟁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10년 이상 뒤에는 양국간 항모 군사력 차이는 크게 줄어들 것이다.

국을 따라잡고 있으나 아직 신기술 개발 능력은 미국이 앞서고 있다.[52] 따라서 미·중간 기술 경쟁의 핵심은 '중국제조 2025'가 성공할 것인지에 달려 있고, 특히 중국이 반도체 부분에서 실리콘 소재를 쓰는 미국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새로운 탄소계열의 제3소재 반도체(실리콘 카바이드와 갈륨나이트라이드) 개발 및 국산화를 추진하는 타산(塔山)계획과 사물인터넷(IoT)에서 미국 기술 제로의 난니와(南泥灣)계획에서 성공할 것인지가 결정적이라고 보인다.[53]

에너지 부문에서 중국은 러시아와 중동에 의존하고 있지만, 미국은 셰일가스 수출국이 되었고 이란 카드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더구나 식량문제에서도 중국은 대외 의존이 심하지만 미국은 거의 자급자족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식량자급화 계획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2020년 10월 말 중국 공산당 5중 전회는 14차 5개년 계획으로 세계경제와 긴밀히 연결하면서 내수시장을 최대한 강화하는 쌍순환전략을 책택했다. 마지막으로 중국이 부실한 관치금융을 갖고 있는데, 세계 최첨단의 능력을 가진 미국회사들이 중국에 진출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게 막대한 이익을 미국으로 가져갈 것이므로 중국이 미국의 공세를 최대한 막으면서 금융을 선진화할 수 있을 지가 미·중 경쟁의 승자를 가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54]

하영선 교수는 결국 21세기 중반까지 미국이 세계질서를 주도할 것이고,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지를 가름하는 관건은 중국의 정치체제와

---

51) 전병서, "미국의 중국 때리기는 '기술·금융'전쟁," 『뉴스핌』, 2020년 9월 24일.

52) 신기욱 교수는 "기술 문제는 제로섬 성격이 강하다. 5G나 플랫폼 경쟁은 특정 산업분야에 국한됐던 1980년대 미·일 기술경쟁과는 차원이 다르다.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이 걸린 만큼 타협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하영선 · 신기욱 대담.

53) 전병서, "중 'US-Tech Free'전략을 주목하라," 『아주경제』, 2020년 9월 21일.

54) 2018년 중국의 산업구조가 서비스업 52.2%, 공업 40.7%인데 비해 미국의 산업구조는 3차산업 80%, 제조업 11.4%로 대조적이다. 미국 소득의 대부분이 서비스업이라는 점에서 미국이 중국에서 노리는 것은 결국 기술 사용료를 확실히 받아내면서 중국 기업을 통제하고 자유롭게 서비스업에 진출해 보이지 않는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는 것일 것이다.

문명의 표준 창출 능력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55] 특히 중단기적으로 미국이 중국보다 우월한 국력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세계화와 국제협력보다 애국주의와 보호무역, 미국 제일주의를 주창하는 트럼프 대통령 같은 리더십이 지속되면 1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의 뒤를 이은 미국이 신흥 패권국 역할을 제대로 못해 1930년대 세계 대공황이 발생했다는 킨들버거 함정같은 어려움이 재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56]

55) 하영선 교수 대담, "미·중 경제 19 대 14…한 쪽이 100% 완승 못해 타협 불가피," 『중앙선데이』, 2019년 6월 22일. 하영선 교수는 "중국 입장에서 미국 우선주의는 글로벌 리더로 부상하는 데 있어 절호의 기회일 수 있지만, 중국이 말하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은 사실상 '중국 우선주의'여서 이것도 지구촌 전체를 아우르는 매력적인 리더십 모델이 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영선 · 신기욱 대담.

56) 하영선, "'국제정치학 석학' 하영선이 말하는 '한국 외교의 길'", 『신동아』, 2019년 11월호, p. 204. 찰스 킨들버거는 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패권국이었던 영국을 모델로 삼아 패권국이 해야될 역할을 개방시장 유지, 안정적인 장기 대부 공급, 안정된 환율시스템 유지, 각국의 거시정책 조율, 금융위기 시 최후의 대부자 역할 수행 등 다섯가지를 꼽았다. 오현환, "만파식적: 킨들버거 함정," 『서울경제』, 2019년 10월 2일.

Ⅲ.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 대응

1. 안보부문에서의 중·러 공동 대응

미국의 포위·압박을 통한 국제질서 주도 전략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는 1996년 전략적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대응해왔다. 러시아나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국제노동분업 구조가 전통적으로 미국과 유럽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고 최근 미국의 세계안보관이 중국과 러시아를 주요 전략 경쟁자로 선언하는데다 미국이 자국 중심주의로 ABM 조약, INF 조약, New START 등 양자적·다자적 국제 안보 레짐을 해체하자 중국과 러시아는 자연스럽게 공동 동반 대응을 강화하게 되었다.[57]

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와 포위·압박이 강화되자 양국은 2001년 상하이협력기구(SCO)를 결성하고 미국을 제외한 신흥강국들인 인도 및 브라질, 그리고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함께 브릭스(BRICS)를 구성하는 한편[58] 양국간 무역·경제·외교뿐 아니라 군사적 협력을 모색하고 연합훈련을 실시해왔다. 양국은 2005년 이래 2013년까지 '평화의 사명'이란 구호 아래 6차례에 걸친 연합군사훈련을 정례화해서 전개했고, 2012년 4월 칭다오(青島) 인근 서해(중국명 황해)에서 1차 연합해상훈련을 실시한 이후 장소를 바꾸어 연례적으로 연합해상훈련도 시행했다.[59] 2013년 7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인근 표트르대제만

[57] Sergei G. Luzyanin, "The Present and Future of Russia-China Relations," *Herald of the Russian Academy of Science*, 90-1 (2020), pp. 9-10.

[58] 이들 나라들은 대국들이지만 경제나 인권문제에서 후진국적 면모를 가졌는데, 인터넷 거버넌스, 국제결제제도, 개발 원조 등에서 미국이나 서구가 통제하는 제도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면서 자유주의 세계 질서와 경쟁하고 있다. 그 예로 이들은 2016년 신개발은행(New Development Bank)을 설립했다. Alexander Cooley and Daniel H. Nexon, "How Hegemony Ends : The Unraveling of American Power," *Foreign Affairs* (July/Aug. 2020), pp. 7-10/20.

해역, 2014년 5월 중국 창장(長江) 부근에서 연합훈련을 시행했고, 2015년은 1단계 지중해, 2단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인근 표트르 대제만 해역에서 연합훈련을 진행했다.

2016년 6월 시진핑 주석-푸틴 대통령은 사드를 포함한 미국의 글로벌 MD 전략을 맹비난하는 '글로벌 전략적 안정 강화 공동성명'을 발표했고, 9월 남중국해 하이난다오 동부해역에서 연합해상훈련을 실시했다. 동년 11월 23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체결되었고, 이후 사드 배치 문제를 둘러싼 한·중간 마찰이 점점 심해졌다. 2017년 1월 12일 중국 외교부 쿵쉬안유 부장조리(차관보급)와 러시아 이고르 모르굴로프 외무차관은 모스크바에서 '제6차 중·러 동북아 안보협상'을 개최하고 미국의 한국 사드배치에 대해 "엄중한 우려와 결연한 반대를 천명"하고 "향후 진일보한 추가 대응조치를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60] 3월 한·미 양국 군 당국이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작업을 시작했다. 동년 6월 9일 중·러 양국이 주도하는 상하이협력기구가 인도와 파키스탄을 동시에 회원국으로 받아들여[61] 회원국 수가 6개국에서 8개국으로 늘어났으며, 세계 육지 면적의 23%, 전세계 인구의 45% (30억명이상)를 포괄하는 거대 기구가 됐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후 나토는 균열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대항마 격인 SCO는 거대안

59) Alexander Korolev (2019), "On the Verge of an Alliance: Contemporary China-Russia Military Cooperation," *Asian Security*, 15-3, p. 244.

60) 『서울신문』, 2017년 1월 14일.

61) 미국이 인도를 끌어들여 중국을 포위·견제하려 하지만, 인도는 비동맹의 맹주시절부터 소련과 가까웠고 현재도 러시아가 첨단무기를 수출할 정도로 유대가 깊으며, 중국과 안보 갈등을 겪으면서도 경제협력은 추구하고 있다. 특히 인도의 SCO 가입으로 중국, 러시아, 인도는 BRICS에 이어 SCO에서도 다자협력을 추구하는 동반자가 되었다. 이런 이유로 2020년 5월과 6월에 양국군이 충돌하고 9월 7일에는 45년만에 총격까지 있었지만 9월 10일 중국 왕이 외교부장과 인도의 S. 자이샨카르 외교부 장관은 모스크바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외교장관 회의에서 만나 분쟁 격화를 막고 소통을 계속해 상호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는 공동보도문을 냈다. 『연합뉴스』, 2020년 9월 11일.

보협의체로 부상한 것이다.[62] 2017년 7월 중·러 정상은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한반도 평화구상을 제시했다. 양국은 7월과 9월에 발트해와 동해 및 오호츠크해에서 두 차례 연합해상훈련을 실시했다. 또한 12월 베이징에서 한국 사드를 겨냥한 미사일 공방 '워게임'으로 평가되는 '공천안전(空天安全)-2017'을 실시했다,

2018년 러시아와 중국은 대북 국제제재와 시리아 및 우크라이나 문제 등 주요 국제 사안에서 공조하고 사상 최고의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확인하면서 경제와 무기 구매 협력을 강화했다. 9월 11일부터 7일간 동시베리아 자바이칼 지역에서 실시된 '보스토크(동방)-2018 연합훈련'을 통해 사상 최고의 밀월관계를 과시했다.[63] 특히 중국 국가원수로서는 처음으로 시 주석이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해 "중·러 양국은 일대일로 공동 건설과 아시아경제연맹 건설에 관해 협력을 강화하길 원한다"면서 "에너지와 농업, 과학기술, 금융 등 분야에서 러시아와 협력을 강화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9년 4월 25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뒤 곧바로 일대일로 국제협력 포럼 참석차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고 며칠 뒤 중·러 양국 해군은 산둥성 칭다오(青島) 앞 서해 수역과 공역에서 '해상연합-2019' 연합훈련을 시행했다. 2012년부터 2019년 사이 양국은 매년 1~2회씩 총 10회의 연합 해상훈련을 실시했고, 이 중 7회는 한반도 인근 지역, 나

62) SCO의 8개 회원국을 합치면 세계 인구의 40%를 차지하고, 면적은 유라시아대륙의 3분의 2를 차지해 나토의 규모를 압도한다. 특히 회원국 중 중국, 러시아, 인도, 파키스탄 4개국이 핵 보유국들이다. 『매일경제』, 2017년 6월 7일 & 『연합뉴스』, 2017년 6월 9일.

63) 시진핑 주석이 블라디보스토크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한 가운데 양국이 1981년 자파드(서방)-81 훈련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연합군사훈련을 시행했다. 러시아에서 30만 병력, 1천대 이상 군용항공기, 80척의 군함, 3만6천대의 전차와 장갑차. 중국 병력 3천 200명, 각종 무기 및 장비 1천여대, 전투기와 헬기 30대가 참여했다. 웨이펑허 중국 국방담당 국무위원 겸 국방부장은 바이칼호수 인근 자바이칼주의 추골 훈련장에서 푸틴 대통령,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과 함께 실사격 훈련과 열병식을 참관했다. 이장훈, "러시아가 다시 동방으로 돌아온다," 『주간동아』, 2018년 9월 10일; 위키백과 참조.

머지 3회는 지중해, 발틱해, 남중국해에서 각 1회씩 실시했다.[64]

트럼프 대통령이 4월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이어 5월 25-28일 일본을 국빈 방문한 데다 6월 5일 영국 포츠머스에서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과 함께 노르망디 상륙작전 7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미국과 유럽의 동맹을 십자군 원정으로 비유하면서 러시아와 중국을 겨냥한 안보협력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진핑 주석은 6월 5일부터 사흘간 러시아를 국빈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중·러관계를 '새시대 전면적 동반자 관계'로 한 단계 더 격상시키고, 중국의 일대일로와 러시아의 유라시아경제연합 구상에 대한 상호 지지를 표명하면서 양 전략이 시너지 효과를 내는 방안을 찾기로 합의했다.[65]

6월 20~21일 시진핑 주석은 평양을 국빈 방문했고 6월 27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일본 오사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하면서 한·중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와 관련, "해결방안이 검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흘 뒤 청와대 한·미 정상회담 뒤 문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정책 간 조화로운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9년 7월 23일 중국 군용기(H-6 폭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2대(TU-95폭격기)가 편대 비행으로 울릉도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으로 진입한 뒤, 이들 군용기와 별도로 비행하던 러시아 A-50 조기경보통제기 1대가 한국 공군 전투기의 근접 비행을 통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 독도 영공을 침범했다. 결국 우리 공군 F-15K와 KF-16 전투기

64) 김선재, 김태호, "중국과 러시아의 해상연합(Joint Sea): 한국 해양안보에 대한 함의," 『KIMS Periscope』, 제190호 (2020년 4월 11일).

65) 장세호, "중·러 정상회담(6.5) 평가," 『이슈브리프』 통권 128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9.6.14).

가 360여발의 경고사격을 가해 쫓아냈다. 중국은 사과나 유감 표명 대신 우방국간 KADIZ에 진입한 것에 대해 침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말 것을 주문했고, 더구나 러시아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한국 전투기가 러시아의 항행을 방해했다는 억지 주장을 내놓았다.

이 사건에서 두 가지 점이 주목된다. 러시아와 중국이 처음으로 연합 공중훈련을 거행하는 등 협력 수준이 공군 연합훈련까지 강화되었고, 이들이 사전 통고없이 한국의 KADIZ 진입은 물론이고 영공까지 침범하고도 사과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한국과의 관계가 편하지 않다는 것이다.[66]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한미동맹의 의지를 시험해 보고, 한·일간에 갈등이 지속되는 독도 인근을 건드리며 한·미·일 관계를 이간했다고 볼 수도 있다.

7월말 러시아가 중국에 신형 방공미사일 S-400 2차분을 인도했고, 8월 2일 미국이 INF를 탈퇴했다. 9월 16일부터 21일까지 러시아는 '첸트르(중앙)-2019'라는 훈련을 러시아 남부, 중부, 시베리아 등 8개 훈련장과 카스피해 등에서 실시했다. 훈련의 본래 목적은 러시아 중부군 내 지휘부와 부대의 전투 준비 능력을 시험하는 것인데, 중국과 인도,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7개국도 참가해 외국 군대들과의 협력 수준을 제고하는 목적도 수행했고 작전 범위를 북극해 방어까지 확대했다. 이는 다분히 이들 국가들과 군사동맹을 맺을 수 있다는 반미적 메시지로 해석된다.[67] 특히 이 훈련에 북한도 참관단을 파견해 러시아 및 중국과의 군사협력 의지를 과시했다.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2019년 각각 상대국을 방문해 양국 관계 격상에 합의하고 서로 상대 모교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으며 우

66) 러시아는 10월 22일 6대의 군용기를 동원해 또 다시 KADIZ를 5시간 50분 동안 무단 진입했다.

67) 이창규 기자, "러시아, 中·印 등 7개국과 군사훈련… 분명한 반미 메시지," 뉴스1, 2019년 9월 18일.

의를 과시하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반미 연대 경고'를 보낸 뒤, 11월 13일 브라질 브라질리아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정상회의에 참석해 전략적 밀월관계 강화에 한목소리를 냈다.[68]

또 러시아와 중국은 2019년 11월 25~29일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함께 케이프타운 인근 해역에서 3국 해군 연합훈련을 시행했다. 중국은 2009년 이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최대교역국이고 이들 브릭스 회원 3국이 연합 해상훈련을 하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69] 또 미국의 경제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중국,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 강화를 추구하여 왔고 그 결과로 12월 27일부터 나흘간 인도양과 오만만에서 3국이 연합 해상 기동훈련을 실시했다. 이란과 중국이 2017년 호르무즈해협에서 연합 해상훈련을 실시했지만, 러시아와 함께 하는 3개국 연합 해상훈련은 처음이었다.[70]

중국과 러시아는 군사교류 강화를 골자로 한 새로운 군사협정을 2019년 중에 체결하려고 추진하기도 했는데, 결국 '군사동맹 결성'은 없었지만,[71] 공중, 해상에서의 공동 작전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연합훈련이나 대면

---

68) 『연합뉴스』, 2019년 11월 14일.

69) 『한겨레』, 2019년 11월 28일; 『신화망』, 2019년 12월 3일.

70) YTN, 2019년 12월 26일. 중국은 12월 22일 보하이(渤海)에서 미국 전역을 사거리로 하는 ICBM급 SLBM 쥐랑(巨浪)-3을 서쪽 방향으로 시험 발사했다. 『동아일보』, 2019년 12월 27일.

71) 러시아 극동연구소 교수인 루지아닌은 중·러가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동맹을 결성하지는 않은 이유는 동맹이 구시대적이고, 제3국들에 대해 엄격한 상호 의무를 부과하고 행동의 제약을 가져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Sergei G. Luzyani, p. 10. 호주의 뉴사우스 웨일즈대 교수 코롤레프는 중·러 군사관계가 공고하고 포괄적이며 제도화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점진적으로 상향추세라면서 양국이 동맹을 선언하지 않은 것은 동맹에 준비가 되지 않거나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현 시점에서는 공식 선언을 연기하거나 안하는 것이 양 측에 이로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Alexander Korolev, p. 247.

정상회담을 갖지는 않고 있지만 다 같이 미국으로부터 제재와 압박을 받고 있고 상호 협력의 호혜적인 이익이 크므로, 양국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2020년 7월 8일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전화통화를 통해 반미 연대를 과시했다. 시 주석은 "(미국의) 패권주의와 일방주의에 맞서 다자주의를 수호하기를 원한다"며 "양국이 서로를 굳건히 지지하면서 외부의 간섭에 단호히 반대하자"고 제안했고, 푸틴 대통령은 중국 전인대의 홍콩보안법 제정을 환영하면서 "중국 주권을 훼손하는 어떤 도발 행위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9월 3일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 정상은 반파시즘전쟁 승리 75주년을 기념해 상호 축전을 교환하며 우의를 강조했다. 시 주석은 다자주의 수호에 방점을 두었고, 푸틴 대통령은 양국간 전우애와 "러·중 전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발전을 촉진하자"고 강조했다.[72] 또 9월 21~26일 러시아가 카스피 연안 아스트라한주에서 '캅카스-2020'이라는 다국적 군사훈련을 주도하는데 서부전구를 중심으로 하는 중국군도 참가했다.[73]

종합적으로 보면 미국은 2014년 3월 러시아의 크림 합병 이후 러시아에 제재를 가하고 급속히 패권 도전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포위하고 봉쇄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사해왔지만, 러시아와 중국은 전략적동반자 협력을 도모하면서 유라시아 대륙 전역에서 두 대국의 전략적 이익을 상호 증진하면서 미국의 공세에 대응하고 있다. 러시아는 천연가스 협력으로 서유럽국가들과의 협력을 도모하고 구소련 공화국, 중동과 아프리카에 전략적 입지를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러시아와 전략적으로 중요한 해역에서 매년 연합훈련을 시행하고 한반도, 대만, 남중국해, 홍콩, 중동, 유럽, 아프리카 등에서 미국의 전략

72) 『연합뉴스』, 2020년 9월 3일.
73) 『연합뉴스』, 2020년 9월 11일.

적 압박과 통제 시도에 대항하고 있다.

미·중·러 3각 관계를 볼 때, 1970년에서 1990년대 초까지 미국은 중·러갈등을 활용해 중국과 연합하여 소련을 견제함으로써 전략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즐겼지만, 이제는 이 삼각관계의 덫에 걸린 형국이다.[74] 특히 향후에도 미국의 국력이 우월하고 양국에 대한 압박전략이 변하지 않는다면 중·러관계의 전망은 밝다고 여겨진다.

2. 경제부문에서의 중·러 공동 대응

중국은 전략적 동반자 러시아와 경제협력을 증진하면서 미국의 압박과 견제에 대항하고 있다. 러시아가 매년 막대한 방산물자를 수출하고 있는데, 러시아는 이를 통해 막대한 외화를 벌고 중국은 미국이나 서방으로부터 수입할 수 없는 첨단무기를 수입해 국방력을 빠르게 강화할 수 있다.

양국간 연합훈련 및 방산협력과 함께 양국간 호혜적인 물리적 연대와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에너지 협력이다. 총사업비 550억 달러를 들여 5년간의 공사를 거쳐 마침내 2019년 12월 2일 약 2,896㎞에 걸친 '시베리아의 힘' 가스관이 개통되었다. 시베리아 이르쿠츠크 코빅타 가스전과 극동 야쿠티아공화국 치얀다 가스전에서 생산되

74) Nishitha Kaushiki and Hilal Ramzan, "Unfolding of the New US-Russia Hostility and Washington's Self-Entrapment: An Analysis," *The IUP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13-4 (2019). 다른 견해도 있다. 이들 두 강국은 미국과의 전략 경쟁에 나서기 어려운 국내 요인을 갖고 있다. 러시아는 인구 노령화와 약한 경제가 제약 요인이고, 중국도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되고 개발 모델의 지속가능성이 의심받고 있다. 이 두 나라는 과거의 바르샤바조약기구 같은 동맹국도 없다. 따라서 이들은 이들 주변지역에서 미국이 힘을 투사하거나 동맹국들을 지키는데 심각한 도전을 가할 것이 분명하지만 과거 소련같은 위협을 가하거나 미국의 군사적 우위에 도전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Brian D. Blankenship & Benjamin Denison, "Is America Prepared for Great-power Competition?," *Survival*, 61-5 (Oct.-Nov. 2019), pp. 56-58

는 연간 380억㎥ 천연가스를 30년 동안 중국 동북 지역까지 보내 중국 수요의 10% 정도를 충당할 것이라 한다. 시베리아의 힘 가스관 개통을 통해 중국은 석탄에 의존해온 에너지 구조를 개혁하고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던 비싼 액화천연가스(LNG)를 러시아 천연가스(natural gas)로 대체해 미·중 무역전쟁에서 유리한 지렛대를 확보하게 됐다. 러시아도 막대한 외화를 안정적으로 벌고 낙후된 시베리아·극동 경제도 살리면서 유럽에 의존하던 천연가스 수출 시장을 중국까지 확장함으로써 천연가스 가격 결정에 있어 더 강력한 힘을 보유하게 됐다. 중국과 러시아가 협력해 이익을 호혜적으로 증진하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질서에 도전하는 상징이 되었다.[75]

물론 러시아가 무기와 에너지 등을 수출해 중국으로부터 상당한 경제적 이득 지원을 얻고 있지만, 러시아도 미국에 대한 군사 안보적 거부권을 활용해 중국을 후원하고 있다. 2019년 5월 15일 미 재무부가 중국 화웨이에 대한 거래 금지를 발표하자 러시아는 자국 5세대(5G) 이동통신망 협력사로 화웨이를 선택해 러시아 전역에 부설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알리바바를 필두로 중국 기업들은 러시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경제 교류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양국 무역액은 2016년 700억 달러였는데, 중국 해관총서(관세청)에 따르면 2018년 양국 무역액은 총 1,071억 달러를 기록해 전년 대비 27.3% 늘었다.[76]

끝으로 미국과 중국간 통화를 둘러싼 경쟁에서도 러시아는 중국을

---

75) 강민경, 『뉴스1』, 2019년 12월 2일 & 김제관, 『매일경제』, 2019년 12월 3일.

76) 최수문, 『서울경제』, 2019년 11월 17일. 러시아는 중국과의 무역을 통해 100억 달러 흑자를 보았다. 교역 물자 측면에서도 변화를 보였다 중국의 러시아로부터의 수입은 과거에는 원자재에 집중했지만 이제는 농산물, 식료품, 공산품, 정보기술 등으로 확대되었다. 또 양국간 상호연결과 관계되는 가스관, 다리, 도로, 철도 등도 상당히 향상되었다. Alexander Lukin & Anatoly Torkunov, "Trump's Policies and the Sino-Russian Entente," *Survival*, 62-2 (April-May 2020), p. 33.

돕고 있다. 특히 러시아는 달러 위주 경제에서 이탈하기 위해 경제에서 중국 위안화 비중을 높이고 있다. 러시아 기업이 중국 수입대금을 지불할 때 위안화를 사용하는 비율은 2014년 9%에서 2017년 15%로 상승했고, 러시아 중앙은행은 외화준비액에서 위안화 비율을 2017년 9월 1%에서 2018년 9월 14%로 대폭 늘리는 대신 같은 기간 달러 비율은 46%에서 23%까지 낮췄다.[77]

[77] 임영신, 『매일경제』, 2019년 5월 20일 & 김제관, 『매일경제』, 2019년 12월 3일.

Ⅳ. 미-중·러 갈등과 한반도

앞에서 미국의 공세로 미국과 중·러간 관계가 대립과 갈등 양상이 더 심해지는 가운데 중·러 양국이 한국이 한미동맹을 최우선시해 단순한 대북억지 차원의 미군 주둔을 넘어 사드 배치와 한·일 GSOMIA 체결 및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를 통해 그들의 적성 진영으로 더 깊숙이 편입된다고 인식하고, 중국은 한한령을 발동해 한·중 경협과 교류에서 각종 불이익을 주는가 하면 양국이 KADIZ나 영공까지 침범함으로써 불만을 표출하는 것을 보았다.

이 장에서는 미국이 중국 및 러시아와 신냉전을 벌이는 것이 북·미 핵협상과 2020년 6월 북한의 도발이나 남북관계 등 한반도 정세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해본다. 비록 결정적인 사유는 아니지만, 미·중간 신냉전적 갈등 고조, 미·러 경쟁과 북·중 및 북·러 관계 개선이 북·미 핵협상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2020년 6월 북한의 도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1. 러시아 및 중국과 한반도

먼저 러시아와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대체로 유사한 기본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 중국이 한미연합훈련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한 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논의하자는 '쌍(잠정)중단, 쌍궤병행'을 해법으로 주장하는 것을 러시아는 지지하면서 마지막 단계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을 구축해 북한을 포함한 역내 모든 국가들의 안보 불안을 해소하고 평화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는 것이 차이가 있을 뿐이다. 중요한 점은 양국 모두 북한의 군사 대응을 촉발하는 한미연

합훈련을 반대하고 미국의 과도한 군사 전개와 공세를 유도하는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반대한다는 점이다. 양국 모두 북한의 핵 개발에 반대하고, 한미동맹의 지역동맹으로의 전환을 억지하며 북·미 어느 측이든 긴장과 갈등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최대한 막으려 하면서 갈등 요인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자는 평화와 협상 지향주의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북한과 동맹관계를 아직 유지하고 있고 러시아도 북한과 특별한 우호관계를 갖고 있지만 미국처럼 북한의 비핵화를 바라고 있다. 단지 미국과 달리 단기간에 이를 달성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의 핵 보유는 동북아에 미군 배치에 명분이 되고 일본이나 한국이 국방력을 강화하고 고유의 핵 능력 개발을 촉진하므로 선천적으로 지역 질서를 불안하게 한다고 인식한다. 따라서 UN의 대북 제재에도 찬성하고 동참하고 있지만, 평양에 대한 압력 행사에는 한계가 있고 과도한 압박은 오히려 북한의 모험주의 행태를 촉발한다면서 난색을 표명해왔다.[78] 특이한 점은 중국이나 러시아 모두 UN 안보리 제재외에 미국처럼 개별국가가 별도의 대북 제재를 가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주장해 왔다는 것이다.

2. 북핵문제와 남·북·미·중·러의 복합게임

이런 인식을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부터 한반도 정세 전개과정을 살펴본다. 당시 문 대통령은 6월 워싱턴을 방문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사드 배치로 어수선한 한·미 동맹관계를 정상화하고, 베를린을 방문해 남북이 상호 비방을 중단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면서 오히려 호혜적인 협력을 진흥하자는 화해·평화·협력 기조를

[78] USIP China-North Korea Senior Study Group, "China's Role in North Korea Nuclear and Peace Negotiations," (May 6, 2019), p. 2.

제창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화염과 분노'(8월 8일), '북한 완전 파괴'(9월 19일, UN)로 압박했고 북한은 연속적인 중장거리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응수했다. 시진핑 주석은 최악의 상황을 막고 한반도 정세 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을 수용하고 장관급인 대외연락부장을 평양에 보냈다. 하지만 김정은은 접견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당시만 해도 미·중관계가 심각한 갈등 상황은 아니었으므로 중국은 UN 안보리 대북 제재에 동참하면서 북한에게 미국과의 핵 협상에 나서라는 미국의 요청을 긍정적으로 들어주는 입장을 가졌었다.

문 대통령의 정성과 회유, IOC의 호의적인 노력으로 결국 김정은은 2018년 신년사를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에 선수를 보내겠다고 호응했고, 문 대통령은 이 기회를 살려 남북 특사외교를 통해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했다. 문 대통령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특사를 평양을 거쳐 백악관에 보내 6개월 전에는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북·미 정상회담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도록 주선했다. 더구나 북·미간에 설전이 오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전격 취소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전격적으로 김정은 위원장과 판문점에서 만나 회담 동력을 살렸다. 이 당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전략적 결단을 내리도록 하고 이를 불가역적으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구상들이 제시됐는데, 특히 북·미 간에 준동맹관계 체결을 검토하자는 파격적인 제안까지 나온 것이 주목된다.

시진핑 주석은 자칫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 정부의 전향적인 제안을 받아들여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한반도 긴장 완화와 남북 경협을 넘어 중국의 국익을 침해할 정도로 북·미관계를 개선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면서 한반도 정세 급변에 매우 민첩하게 대응했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전후 두 차례와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직후에 김정은을 중국에 초청해 환대하면서 상황을 관리했다. 물론 이는 김정은에게도 대남, 대미 협상력을 강화해주는 배후를 확보하는 일이었다.

그 결과 북·중 관계는 신속하게 전통적 우호관계를 회복했다. 2018년 3월 26일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은 양국관계를 '혈맹관계'로 규정했고, 5월 7~8일 다롄의 두 번째 정상회담에서 변함없는 순치관계를 언급했다. 시진핑의 지원 의사를 확인한 김정은은 자신감을 가지고 트럼프를 상대해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상당히 유리한 합의문을 도출했다. 북한은 1, 2항에서 북·미관계 정상화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한반도 평화체제'를 얻어내는 성과를 거두었고, 3항에서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상적으로 약속했으며 4항은 유해송환 약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합의에 만족을 표명했다. 6월 19일 베이징 북·중 3차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중국동지들과 '한 참모부'에서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79] 김정은으로서는 불과 6개월 내에 문재인,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시진핑 주석 모두와 우호 관계를 형성한 외교적 성과를 거둔 것이다.

그러나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북·미관계 개선이나 평화체제 수립은 거론도 않으면서 북한의 비핵화만 재촉하자 북·미협상은 바로 난항에 빠졌다. 이에 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남북군사합의서를 체결하고 김 위원장으로부터 북핵 문제 진전을 위한 미국의 적절한 보상에 따른 영변 핵 영구폐기를 얻어내 평화 프로세스의 동력을 살렸다.

김정은이 하노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2019년 1월 초 또다시 베이징을 방문하자 시 주석은 생일 축하 인사와 함께 국빈대우를 제공했다. 중국의 강력한 후원에 힘을 얻어 김 위원장은 득의양양하게 기차로 중

79) 이성현, "김정은-시진핑 시대 북·중관계 정의," 『세종논평』, 2020-07 (세종연구소, 2020.04.24).

국 대륙을 종단해 개선장군처럼 하노이로 갔다. 그러나 트럼프가 예정되었던 합의 내용이 미 국내정치상 흥행 타산에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갑자기 북한의 추가 양보가 포함된 제안을 내놓았고, 김정은도 시진핑 주석의 지원을 믿고 이를 거부함으로써 결국 성과 없이 회담은 끝났다. 어처구니없게도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을 탓하기보다 그간 성실하게 중재하고 신뢰와 평화를 촉진해온 한국 정부를 원망했다.

이번에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나섰다. 외교적 낭패로 곤경에 빠진 김정은을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로 초청해 4월 25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푸틴은 트럼프가 기대를 저버렸지만, 북한이 핵 협상을 벗어나 일탈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설득해 미국의 과도한 한반도 영향력 확장 명분을 차단하고, 극동지역의 안정, 발전 및 협력의 기반을 조성하며,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할 뿐 아니라 남·북·러 경협 기반을 확보하고자 했다. 김정은은 핵안보 부문에서 미국과 쌍벽을 이루는 러시아의 지원을 확보해 협상력을 강화하고 대미 협상 실패시 지원을 보장받으며, 북방 3각 관계에서 중국 편향을 시정해 균형을 맞추려 했다. 또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지원 경쟁을 조장하고 제재로 어려워진 북한 경제 재생에 지원을 요청하였다. 특히 그간 러시아가 주장해온 북한의 비핵화에 상응한 대북제재 완화를 푸틴이 대미, 유엔 외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주장해 줄 것을 부탁했다.[80] 주목되는 발언은 푸틴이 "비핵화는 군축이므로 북한에게 안보와 주권 보장이 필요하다. 미국과 한국의 보장으로 부족하다면 6자회담 틀이 대북 국제 안전보장 체제 고안을 위해 아주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또 러시아가 2018년부터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중단과 핵실험장 폐쇄에 대해 제재 완화로 보상해야 한

80) 김정은은 연회 축사에서 항일대전의 공동 투쟁과 조선 해방을 위해 소련 장병들이 바친 피를 지적하면서 혈맹의 역사를 상기했고, 푸틴은 회담에서 안보리결의 상 2019년 말까지 모두 귀국시켜야 하는 러시아 내 북한 근로자 문제를 논의했다면서 "여러 대안이 있고 침착한 해결책이 있다"고 말해 북한의 고민에 화답했다. 『연합뉴스』, 2019년 4월 25일.

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는데, 향후 북핵문제 해결과 대북 제재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더욱더 북한의 입장을 지지할 가능성을 보였다는 것이다.

정상회담 직후 푸틴 대통령은 베이징에서 열리는 일대일로 정상회담에 참석해 시진핑 주석을 만나 북·러 정상회담 내용을 설명하고,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중·러 공동 구상의 1단계가 상당히 진행됐으며 이제 2단계로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푸틴은 한반도가 아직도 전쟁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이 근본적인 문제를 종결하고 안보 측면에서 북한에 충분한 그러한 조건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81] 그의 말을 종합해 보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중단되고 한미연합훈련도 대폭으로 축소되었으니, 이제 종전선언 등을 통해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한 달 반 뒤인 2019년 6월 20일 시진핑 주석이 중국 지도자로서는 14년 만에 북한을 국빈방문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네 차례나 중국을 방문한 뒤에서야 시 주석은 2012년 11월 중국공산당 총서기 등극으로 집권한 후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한 것이다. 시 주석에게 25만 명의 평양 시민들이 공항과 거리에서 환영하는 등 황제급 대우를 한 김정은은 정상회담에서 "조선은 인내심을 유지할 것"과 "유관국(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한반도 문제 해결에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해 시 주석의 두 가지 권유에 호응했다. 이에 보답하듯이 시 주석은 한반도 문제의 북·미 대화 등을 통한 정치적 해결을 지지하고 "중국은 조선이 자신의 합리적 안보 및 발전에 관한 관심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이 닿는 한 도와주겠다"고 말해 김 위원장에게 안보와 경제 지원을 약속했다.[82]

81) 김중호 특파원, CBS노컷뉴스, 2019년 4월 26일.
82) 차세현 기자, 『중앙선데이』, 2019년 6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북·미 정상간 재상봉을 제안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정치적 흥행을 고려해 은밀히 추진했고 김정은 위원장이 수용해 6월말 판문점에서 남북·미 3자 정상간 회동이 성사되었다. 하지만 트럼프에게 북·미 정상 회동은 흥행이 주 목적이었던데다, 볼턴 국가안보보좌관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비핵화 1단계와 적당한 보상을 교환하는 합의는 완강히 반대하고 북한의 선행동이나 의미있는 양보를 요구했으므로 어렵게 마련된 10월 북·미 실무회담에서도 아무 성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이후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에 연연해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오히려 제도적 안정을 위한 체제안전 보장과 발전권을 위한 대북 제재 완화 등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미국이 먼저 보여주지 않으면 아예 핵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앞세워 미국의 여러 협상 개최 제안을 외면해왔다.

이러한 북한의 배짱의 배후에 중국의 물밑 지원이 작동하는 듯했다. 특히 4월 북·러 정상회담에서 예견되었듯이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완화를 주장하면서 북한을 후원했다. 북한의 국방과학원 대변인이 12월 14일 담화를 통해 "2019년 12월 13일 22시 41분부터 48분까지 서해위성발사장에서는 중대한 시험이 또다시 진행되었다"고 발표함으로써 김정은이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최후통첩성격으로 제시한 미국의 대북정책 전환 마감기한인 연말을 보름 정도 앞두고 장거리미사일 발사 동향을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남북 간 '철도·도로 협력 프로젝트'를 제재 대상에서 면제하고 북한의 수산물·섬유·조형물 수출 금지를 풀어주며 북한의 모든 해외노동자들을 12월 22일까지 송환토록 하는 제재 조항을 해제하는 것을 포함한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 북한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으로 북·미 간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는 가운

데,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이 요구해온 제재 해제·완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 회복과 북핵문제 해결 동력을 마련하자고 직접 행동에 나선 것이다.[83] 물론 예상대로 미국은 물론이고 여타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인 프랑스나 영국도 이에 반대해 채택되지 않았으므로 북·미협상 재개의 발판이 되지는 못했지만, 이는 북·미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이 도발로 치닫지 않는 명분을 주어 위기를 방지하는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어쨌든 대북 국제제재는 미국의 주도 하에 사상 최고 수준으로 계속 추가된데다 2020년 들어서서 코로나 19 창궐로 북한이 외부와의 교류와 접촉을 차단하여 대외 무역이 60% 이상이 축소되었고 여름 홍수와 태풍의 피해까지 겹쳐 북한의 경제는 더욱 추락해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도 코로나 19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미국 내에 매일 수만 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고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된데다 지지도도 떨어져 다양한 방식으로 중국을 공격하는 반중 조치 강화에 몰두했으나 본인이 직접 코로나 19에 감염되는 등의 이유로 북한과의 협상에는 신경쓸 여유를 갖기 어렵게 되었다.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으로 지지도를 반전시키려 해도 환자의 몸으로 실행할 수 없고, 실현된다고 해도 회담이 미국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거둘 경우 받게될 비난에 대한 우려로 인해 추진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 김정은의 입장에서도 트럼프가 낙선될 가능성이 상당하므로 대선 결과를 보고 미국과의 관계를 재형성하려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

83) 『연합뉴스』, 2019년 12월 17일.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도발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의 요구로 동월 11일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도 "대북제재는 그 자체로서 목적이 아니라, 목적을 이루는 수단일 뿐"이라면서 대북 제재의 완화를 거듭 주장했다.

3. 2020년 6월 북한의 도발 평가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전망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미국이 주도해 온 대북 제재 강화와 북·미간 핵 협상에서의 난항으로 발생한 외교적 실패와 경제 추락을 자기 책임이라고 반성하거나 미국을 탓하기보다 한국의 책임이라고 전가하는 것은 어이없는 일이다. 더구나 북한이 한국 정부를 미국에게 사대주의 태도를 보인다고 비난하고 있는데, 북핵 협상이 난항에 빠진 것은 먼저 자기의 능력이 부족한 탓이 가장 큰데다 그 다음으로는 강대국인 미국을 원망할 수도 있는 사안이지만, 이를 한국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을 보면 북한이야말로 대미 사대주의의 전형이라고 평가된다.

어쨌든 2020년 6월 초에 감행된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등 북한의 일련의 도발은 다분히 미·중 갈등 고조로 더 강력해진 중국의 대북 후원 의사에 기대어 내정과 외치의 실패, 그리고 실정에 대한 주민들과 군부의 국가 지도부에 대한 비난을 염치없이 한국 정부에게 전가하려는 꼼수로 평가된다. 중국의 대북 80만t 식량 지원설이 이런 평가를 뒷받침한다.[84]

또 남북간 통신선을 차단하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킨 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지역 및 비무장지대 군 병력 전개, 대남 전단 살포, 대남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기 직전에 전격적으로 김정은이 등장해 이를 보류시킨 것도 사전에 계획된 시나리오에 따랐거나, 아니면 추

[84] 중국은 시진핑 주석 방북 1주년을 맞아 북한에게 쌀 약 60만t, 옥수수 20만t을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는 보도가 있었다. 유상철, "이래서 文 욕했나…시진핑, 北에 식량 80만t 보냈다," 『중앙일보』, 2020년 6월 21일. 물론 필자는 이러한 도발의 가장 큰 이유는 국내정치적 고려로서 김정은 위원장이 2018년 초부터 시도한 남북 화해 및 북·미대화 추구를 위해 핵과 중·장거리미사일 시험을 중단한데다 풍계리 핵실험장 붕락, 미국인 인질과 미군 유해 송환, 장거리미사일 발사대 해체(중간 단계에서 중단) 등 상당한 양보조치를 취했지만, 그 대가로 기대한 대북 제재 완화나 종전선언, 북·미 관계 정상화, 북한 경제 상황 개선 등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북한 주민들의 삶은 더 어려워져서, 군부나 주민들이 지도부의 전략적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비난할 수 있으므로 미리 그 책임을 한국에 돌린 것이라고 판단한다. 즉 국내정치적 요인이 가장 컸다는 것이다.

가 도발로 잃는 것이 얻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판단과 함께 미국과의 협상 분위기를 완전히 깨지는 말아야 하며, 중국이나 러시아도 한반도의 과도한 긴장 고조를 바라지 않는다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된 데 따른 것이었다고 평가된다.

주변 강대국들의 한반도 전략과 남북관계를 포함해 그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벌인 협상 과정을 되돌아보면 미국이 중·러와 계속 갈등을 벌이면서 대북 제재 완화에 경직성을 보이고 북·미간 일괄타결식 합의를 모색한다면 북한은 중·러에 밀착 접근해 계속 버텨나가면서 사실상의 핵 보유국이 되는 길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만약 미국이 북한과 제재를 완화하고 체제를 보장해 주면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단계적인 합의를 모색해 나간다면 북한의 비핵화도 단계적으로 진전되고 미국과 중·러과의 관계도 개선될 수 있는 계기를 맞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미국이 이러한 정책을 채택하지 않고 있는 것은 북핵문제 해결보다 중국·러시아·북한 모두를 통제하고 동북아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더 중시하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V. 정책 제안

미국은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에게 제재를 가하고 있고, 중국과도 무역 갈등에서부터 시작해 관세 부과, 정치·경제체제 즉 제도 변화 압박을 거쳐 전면적인 경제 전쟁과 기술 전쟁, 무기 경쟁과 안보 및 이념 대립을 포함하는 패권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평가된다. 이러한 미국의 대외전략은 중국 및 러시아뿐 아니라 한국의 국가전략에도 심각한 도전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한국은 한·미동맹을 대외전략의 주축으로 삼고 있지만, 중국 및 러시아와의 전략적 동반자적 협력도 유지하고 발전시키려 하고 있다. 또 북한의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남북간 협력을 증진하여 한반도 평화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킨 뒤, 장기적으로는 평화통일을 달성하는 것을 국가목표로 갖고 있다. 즉 한국은 남북한간 평화 회복 및 정착, 북핵문제 해결, 남북한의 호혜적인 협력, 동북아의 교역과 상호투자 증대, 사회·문화 교류 증진, 동북아 철도공동체와 에너지공동체 구성 등 동북아 국가들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진흥하고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를 구축하면서 평화통일도 달성하려는 구상을 갖고 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는 힘의 우위를 내세우면서 한·미동맹을 북한뿐 아니라 중국 및 러시아도 가상적으로 지목하는 지역안보동맹으로 전환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을 긴밀하게 강화해 북·중·러에 대한 견제와 대립 구도를 강화하며 대중 포위 및 봉쇄·견제 구도 조성에 한국의 동참을 요구하려 하므로 국가 대외정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구나 북한은 각종 도발로 위협을 가하고 있고, 시진핑 주석의 방한 전에는 한·중관계도 정체 국면일 것이며, 일본과도 강제징용 배상 집행과 GSOMIA 갱신, 한국에 대한 일본의 제재와 WTO에 한국의 일본

제소, 아베의 한국 G7 정상회담 참여 반대 등을 두고 껄끄러운 상황에 처해 있는 등 한국 정부는 외교·안보 부문에서 중첩된 난관에 처해 있다.

이에 한국의 대응방안으로 먼저 포괄적인 전략 기조를 제시하고 대북, 대미, 대중, 대러, 동아시아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포괄적인 대외전략 기조

미국과 중국간의 경쟁이 점차 전면적인 대립과 갈등으로 확대되면서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이 당연히 미·중관계에서 미국 편에 서야된다고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 역시 한국의 무역에서 중국이 어느 나라보다 압도적으로 중요한데다 내용 면에서도 수백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안겨주는 것과 북한에 대한 탁월한 영향력을 지렛대 삼아 한미동맹 자체를 노골적으로 문제삼지는 않지만 한국과 중국이 한반도에서 긴장완화를 이익으로 간주해 추구하는 것과 달리 미국의 역할은 우려의 대상이라면서[85] 한국이 반중 정책을 펴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견지해 왔다.[86]

무엇보다 정부는 21세기 복합적인 국제무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중 관계를 단기·중기·장기로 나누고 다양한 시나리오와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대한 구체적인 상황 전개를 예상하고 상황별로 정책 대안과 행동 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87]

---

85) 이러한 중국의 입장은 중국 언론의 주장에서 잘 확인된다. 이성현, "중국 언론이 보는 한국의 '북핵 중재자' 역할: 인식과 함의," 『세종정책브리핑』 (세종연구소, 2019년 12월 19일), p. 10.

86) 2019년 12월 5년만에 한국을 방문한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경북 성주에 배치된 주한미군 사드와 관련 한국 정부에 "적절히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고,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 우선주의와 대중 압박전략을 겨냥해 "현재 국제정세는 일방주의와 강권주의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2019년 12월 6일.

87) 하영선, 2019년 11월호.

또 현재 미국이 한국 정부에게 공개적으로 중국을 적대시하는 반중 노선에 가담하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의 남침 억지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창설된 한미동맹의 설립 목적과 취지를 넘어서는 것이다. 미국이 중국을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공산당 일당지배국가라면서 이데올로기 대결 양상으로까지 치닫고 있지만, 현재 미·중 대결은 그 양상은 치열하지만 과거 냉전시대와 같은 통치이념 사이의 대결이라기보다 향후 자본주의 발전에 대한 대안적 모델을 둘러싼 경쟁에 가깝다. 민주주의 원리에서 중국체제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부족함을 비판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체제를 타도해야할 이념적 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냉전적 이념대결 상황으로 규정하고 미·중 사이에서 한 나라를 택일해야 한다는 경직된 이념적 진영논리는 넘어서야 한다.[88]

미국과 중국의 압박에 대해 정부는 미국과 중국이 전방위적으로 경쟁하고 있지만 규칙에 기반한 경쟁과 포용적 국제질서와 규범을 중시한다는 점[89]에 착안해 21세기 시대정신에 적합한 외교 원칙과 규범을 내세워 대응해야 한다. 사실 1990년대 초에 소련과 동구가 해체되면서 '평화공존과 공영을 지향하는 지구촌 한 마을'이라는 탈냉전 시대정신이 국제사회에 형성되었다. 현재 중국 정부는 대체로 이런 시대정신을 국가 대외정책 방향으로 지향한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있다. 그런데 트럼프 집권 이후 미국은 '미국 우선주의'를 국가정책 지침으로

88) 김원식, "격화되는 미·중대결과 이념적 진영논리 경계 필요성," 『이슈브리프』, 통권 205호 (2020.7.30), pp. 2-3.

89) 하영선, 전재성 (2019년 6월 5일), p. 7. 2020년 8월 21-22일 부산을 방문한 양제츠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중앙외사판공실주임은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을 만나 시진핑 지도부의 대외정책 노선인 신형대국관계의 상호존중, 공평정의, 협력공영을 소개하고 국제협력, 다자주의와 자유무역 보호를 위한 한·중 협력을 강조했다. 정재흥, "양제츠 방한의 의미와 전략적 함의," 『세종논평』, 2020-19 (세종연구소, 2020.08.26). 한국 정부는 이러한 중국의 대외전략 기조와 미국의 전략 기조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나가야 한다.

내걸고 미국 국익 극대화를 최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세계 질서도 이에 부합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우리는 자유와 정의, 민주주의, 인권을 중시하면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공영이라는 공공재를 제공하는 미국과 동맹을 맺고 상호 협력하면서 올바른 국제진영의 일원이라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현재 미국은 다양한 인종간 차별 문제의 심각성이 더 커지고 있고 독선적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서슴없이 내세우며, 환경, 전염병 예방, 인류 문화 보존, 국제 범죄 대처를 위한 국제형사재판소 운영, 국제 전략 무기 통제 등 지구촌 공동 협력 사안에서 미국의 국익을 앞세워 예외를 인정받으려 애쓰고 있다. 미국 편에 서는 것이 항상 시대정신과 부합하던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국과의 우호관계는 반드시 유지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동맹도 적절하게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현명하다. 그러나 미국이 미국만의 이익을 독단적으로 추구하는 데까지 무조건 동참하는 것은 최선책이 아니다. 물론 미국이 태평양상에서 직접 공격을 받으면 우리도 국회의 승인을 거친 뒤 미국에 군사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한미동맹은 동북아에서는 북한의 남침과 도발 억지를 위해 설립된 것이므로 이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 존재사유라고 강조해야 한다. 나아가 한국의 외교정책 기조로 '국제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전방위적인 협력'을 내세우고 이에 부합될 경우에만 미국의 요청에 능동적으로 응할 수 있을 것임을 선언해야 한다. 이런 기준에 맞는다면 어느 나라와의 협력에도 적극적으로 호응하지만, 설령 "미국이 요청하더라도 북한이 아닌 제3국을 적으로 간주하는 일에는 참여하기 어렵다고 선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즉 한국은 한미동맹을 중시하면서 한·중 협력도 유지·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90] 한 걸음 더 나아가 미국과 중국도 동북아 지

[90] ASEAN 국가들도 한국과 유사한 고민을 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리셴룽 총리는 지역협력을 지향하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를 다 지지하고, 중국과의

역에서 편가르기나 갈등을 수반하는 독자 행동을 추구하기보다는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공동의 규범을 창출하고 협력해 함께 지켜나가자고 선도하고 설득하는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남중국해 문제를 사례로 살펴본다. 한국이 필요한 석유의 대부분을 중동에서 들여오므로 원유 수송 안전 보호가 우리의 국익에도 부합한다. 따라서 이란에게 우리의 입장을 잘 설명하면서 미국의 요구를 적절하게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의 외교전략 지침과 국익에 다 부합하므로 남중국해에서의 항해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선언하되 한국 해군이 미 함대와 함께 반중 시위를 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강경화 외교장관은 2019년 11월 23일 나고야에서 미국의 존 설리번 부장관을 만나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간 조화로운 협력을 지속 발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미국의 요청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2020년 5월부터 미국은 반중 경제안보동맹인 경제번영네트워크(EPN: Economic Prosperity Network)에 가담하라고 우리 정부에게 계속 요구하고 있다. 중국을 제조와 조달 등 글로벌공급망에서 배제하는 새로운 세계 공급망 재편에 한국이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91] 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은 2020년 7월 28일 호주와의 외교·국방장관 '2+2 회담'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전 세계의 민주주의 친구들이 우리 시대의 도전과제가

유대를 증진하려는 ASEAN 국가들의 노력도 반미적으로 인식되지 않기를 희망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Hsien Loong Lee, op.cit., pp. 14-16/18.

91) 미 국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키스 크라크(Keith Krach) 미 국무부 경제성장담당 차관은 5월 20일 아시아태평양미디어허브 특별전화브리핑에서 국무부가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해 구상하는 경제번영네트워크(EPN·Economic Prosperity Network) 구축과 관련해 한국과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매일경제 2020년 5월 22일. 미국이 말하는 이른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의 모임인 EPN의 가입 물망에 오른 국가는 한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대만, 이스라엘, 인도, 베트남 등이 거론되고 있다. 『뉴시스』, 2020년 5월 22일.

자유를 소중히 여기고 법의 지배에 근거한 경제적 번영을 원하는 것"이라며 한국을 언급하고,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비판하면서 한국, 일본, 인도, 호주, 유럽을 주요 동맹으로 언급했다.[92]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도 2020년 8월 31일 '미·인도 전략적 동반자 포럼'에서 미국·일본·호주·인도의 4자 안보대화체 '쿼드(Quad)'를 유럽의 나토처럼 다자 안보동맹으로 공식 기구화하고 차기 행정부에서라도 한국과 베트남, 뉴질랜드 등을 포함한 '쿼드 플러스' 출범도 바란다는 속내를 내비쳤다.[93] 이처럼 미국의 반중 연합 동참 요구는 경제와 안보 양방향에서 점점 더 구체화되고 강도가 강해지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인도-태평양 전략 가담을 최대한 삼가고 버티는 게 현명하다. 물론 경제 및 문화 부문에서의 한·미협력 강화는 바람직하므로 미국이 동아시아의 공동 번영을 추진하는 문화·경제 협력사업을 제창한다면 이에는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경제에서도 중국을 배제하는 공급망에 가담하는 것은 시대정신에 반하고 한국의 경제 이익을 결정적으로 훼손할 것이므로 최대한 신중해야 할 것이다.

한편 미·중이 경쟁하더라도 어느 정도 협력을 모색하던 때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G2간 협력이 이루어졌지만, 최근 양국간 패권 경쟁이 전면적인 무역 전쟁과 전방위적인 신냉전 대결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중국이 미국이 원하는 대북 제재에 협력해야할 동기는 약화되고, 오히려 북한과의 전략적인 협력이 중요해지는 구조가 형성되었다. 미·중간 경쟁이 불가피하더라도 일정 수준과 국제적인 규칙에 따라 통제되고 사안에 따라서는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공유되어야 양 강대국들의 협력 속에 북핵문제 해결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

92) 『헤럴드경제』, 2020년 7월 29일.
93) 『경향신문』, 2020년 9월 3일.

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와 러시아는 미·중 관계가 협력 관계로 재편되도록 갈등 요인을 축소시키고 소통을 도우며 중재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

북핵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려면 장기적인 협력의 비전과 인식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북한의 비핵화의 속도를 결정하는 것은 김정은의 의지라기보다 외교적, 정치적, 군사적 쟁점이 복합적·포괄적으로 연계되어있는 북한의 체제안전보장 조치이다. 그런데 한국이 북한의 체제안전보장을 전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남북관계의 개선은 비핵화의 진전에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하나의 요인이지만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는 없다. 북한의 비핵화는 체제안전보장을 위한 미·중 및 주변국들의 복합적인 이해의 조율에 따라 장기적으로 점진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북한의 비핵화 협상을 중재·촉진하는 한국의 역할은 북한의 체제안전을 보장하는 주변국의 전략적 이해의 균형점을 조정하는 것이다.[94] 이를 위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제도화 등을 설득력 있게 선도하는 외교적 지혜가 발휘되어야 한다.

2. 대북정책

북한 지도부를 비방하는 대북 전단 살포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분노를 과시한 상황에서 대북정책에서는 상호 공존과 체제 존중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북한보다 우리에게 평화가 더 소중하므로 평화를 지키기 위해 북한 체제를 우리가 먼저 위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해 주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이 우리 국민, 영토, 주권을 침해하는 도발을 감행

[94] 윤대엽, "체제안전보장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 시나리오: 한미동맹과 미·중관계를 중심으로," 『국방연구』, 62-3 (2019년 9월), pp. 27-28.

하기 전에는 북한의 도발에 빌미가 되는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라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국가안보를 저해할 경우에는 제한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즉 북한을 비판하는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북한 내 전단 살포를 통해 북한의 체제 유지를 저해함으로써 북한의 보복을 자연스럽게 유발하여 남북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국가안보 차원의 평화를 해치는 것은 막아야한다. 전단 살포 단체들이 자제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공권력을 동원해서 이를 막으면서 조속히 입법도 해서 대북 내정간섭은 제도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또 등산곶 인근에 접근하는 우리 공무원을 살해한 사건에서 드러나듯이 북한이 코로나 19로 상당한 곤경에 처한 것이 분명하므로 K-방역 성공으로 선진 의료를 확인한 우리는 대북 의료 및 방역 지원을 다방면으로 강구하여 추진하고 식량 및 비료 등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 당국이 지적했듯이 우리가 남북간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모든 사안들을 사전에 미국과 조율하려 했고 미국이 이를 꺼리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면 이를 따른 데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정당하게 스스로 행할 수 있는 부분은 행동한 사후에 미국에 통보해주는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 남북관계의 제반 사안들을 모두 미국의 입장을 묻고 재가 받는 방식으로 시행한다면 북한은 한국과 상의 및 협상하거나 합의를 모색하기보다 직접 미국과 상대하려 할 것이다.

3. 대미정책

대미 정책에서는 우선 지체되고 있는 한·미 방위비 협상을 조속히 적절하게 마무리 지어야 한다. 이 협상이 난관에 봉착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을 일방적으로 감축하려 할 수 있고, 한국 내에서 국방

자율성에 대한 요구가 더 커질 것이다.[95] 이런 맥락에서 현재 미국이 과도한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받아들이기보다는 미국의 국방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있다. 한국의 국방력 향상을 감안하면 주한미군 병력이 과다하게 배치되어 있으므로 2만8천500명 중 1만명 정도는 감축해도 좋다고 제안할 수 있다. 이는 미국의 부담을 덜어주고 미국이 먼저 감축을 검토한다는 발표를 할 경우에 우리가 받을 충격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전작권 전환에도 긍정적으로 작동할 것이고 우리 군의 정신 무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남북관계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제안을 받고 주한미군 일부 철수의 득실을 따져볼 것인데, 미국이 대외전략에서 가장 중시하는 중국 견제를 위해 해외 미군주둔지로 한국이 최적의 장소이고, 철수한 미군을 전역시키지 않고 그대로 미국에서 유지할 때 한국 주둔 시보다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며 미 의회도 주한미군 감축을 반대하고 있으므로 결국 주한미군 규모를 그대로 두면서 방위분담금 증액 요구를 대폭 축소해 타협을 모색할 것이므로 기대된다.[96]

북핵문제와 관련해 미국 행정부는 시간이 우리 편이라고 느긋하게 생각하다 북한의 핵 고도화를 사실상 용인하고 있고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는 미국 책임자들에게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제재를 복구시키는 스냅백(snap-back) 제도를 활용하여 현재

---

[95] Stratfor Worldview, "What South Korea, Japan, and Germany Think of American Troop Demands," *The National Interest*, Nov. 30, 2019, pp.3-4.

[96] 한미동맹으로 한국 뿐 아니라 미국도 상당한 득을 보고 있다. 부산대 켈리 교수는 이를 다섯 가지로 요약했다. 한국은 믿을 수 있는 동맹국이었고 주한미군을 위해 상당한 기여를 했으며 미국의 과도한 개입 없이도 북한과의 대치를 잘 이겨냈을 뿐 아니라 한국민 대다수가 친미적이고 미래 국제관계에서 방향타가 될 동아시아에서 미국이 공고한 동맹을 갖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이다. Robert E. Kelly, "U.S.-South Korea Alliance: 5 Reasons America Should Be Thankful For It," *The National Interest*, Nov. 28, 2019.

최고도로 강화된 대북 제재를 일부 탄력적으로 완화시켜주면서 비핵화에 착수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설득해야 한다. 특히 미국이 북핵문제를 진정 해결하려 한다면, 미국의 협상 전략과 태도가 이 문제의 해결을 보다 우선시하고 보다 전향적인 내용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현재 한국과 북한, 중국은 북핵문제 해결 접근법에서 대체로 유사한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북·미 협상에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목표로 나가가기 위해 상호적인 조치를 취하는데 필요한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단계적이고 병행적인 동시행동 과정(step-by-step, parallel-track process)에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도 단계마다 교환되는 내용에 차이가 있을 뿐 점진적이고(incremental) 단계적이며 상호적인 동시 행동을 취하자고 주장하므로 북한의 접근법과 유사하다. 중국이 주장하는 '쌍중단, 쌍궤병행'도 큰 그림에서 일치한다. 단지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를 단숨에 요구하는 빅딜(a big deal)을 주장한다.

그러나 북한과 미국의 국력 차가 핵무기 수나 운반수단, 경제력 모두에서 100배 이상 차이가 나고 상호 신뢰가 박약한데 단번의 비핵화는 북한이 전쟁에서 패배하거나 경제적으로 패망할 수 있는 압박을 가할 수 있기 전에는 타결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여겨진다. 특히 비핵화는 돌이키는데 많은 비용과 노력이 소요되는데, 미국이 제공하는 상응조치는 쉽게 돌이킬 수 있으므로 북한이 이런 제안을 받을 리 없다. 결국 미국은 북핵문제 해결보다 다른 전략적 이득을 더 중시하므로 시간만 보내고 있다고 비판받을 수 있다. 그 대신 미국은 북·미관계가 정체 중인 상황에서 남북관계가 진전되는 것을 통제하고 있고, 남·북·중 3국이 공동의 의제를 갖지 못하도록 북한과의 협상에서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며, 북·미 교착의 책임이 미국보다 북한 측에 있다는 것을 말로만 항변하고 있다고 비판받을 수 있다.[97] 한

국 정부가 한·미 우호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하면서도 미국이 진정으로 북핵문제 해결에 성의를 보이도록 유도하는 지혜를 모으고 설득력 있는 현명한 외교를 펼쳐야 한다.

또 미국은 한국을 인도-태평양 전략에 전면적으로 가담시키고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전초병으로 삼으려는 의도를 가진 듯이 보인다. 특히 군사·안보 면에서도 북한의 남침과 군사도발을 억지하려는 목적으로 체결한 한미동맹의 성격을 변형시켜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과 러시아까지 억지·견제하는 역할을 부여하려 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이미 이런 맥락에서 미국은 한·일간에 GSOMIA 체결을 압박해 성사시켰고, 한국에 사드를 배치했으며 최근 한·일 GSOMIA 종료를 막기 위해 한국과 일본을 압박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미국은 평택 미군기지 같은 한국 영토 내에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추진할 것이다. 하지만 이는 여러 가지 우려를 낳을 것이다. 첫째, 중거리미사일은 사거리상 중국과 러시아 극동을 타격 대상으로 삼게 되므로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은 사드 배치 시보다 훨씬 더 클 것이다. 한미동맹의 목적이 사실상 대북 억지에서 북한뿐 아니라 중국을 포위·압박하는 것으로 변질될 수 있다. 최악의 경우 미·중이나 미·러 및 중·일 갈등 시 사드가 배치된 성주와 함께 중거리미사일이 배치된 한국내 미군기지가 중국의 우선적인 타격 목표가 될 수도 있다.[98] 둘째, 물론 미국은 재래식 중거리미사일을 배치할 것이라고 하겠지만 사실 탄두를 핵탄두로 바꾸면 이는 핵 미사일이 될 것이므로 북한은 비

[97] USIP China-North Korea Senior Study Group, op.cit.

[98]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020년 2월 10일 '로시이스카야 가제타'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이 일본이나 한국에 배치되면 우랄산맥까지의 모든 영토가 사정권에 들어갈 수 있고,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아태지역에 배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당연히 우리는 대응할 것"이라면서 한국 등 아태국가들과 이것이 어떤 위험을 내포한 것인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대화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철종, "러 외무 "미국이 한국 등에 중·단거리미사일 배치하면 대응"," 『연합뉴스』, 2020년 2월 10일.

핵화 협상을 포기하겠다고 압박할 것이다. 북핵문제 해결 동력이 상실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사전에 대응 논리를 수립하고 사드 배치 시에 보인 우유부단함 대신 단호하고 확고한 태도로 대응해야 한다. 특히 미·중 중 어느 한 나라를 선택하는 전략적 결정은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 한국이 중국이나 러시아와 전략적으로 대립하겠다는 각오가 서기 전에는 미국의 중거리미사일 배치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즉 그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지만, 중국이나 러시아가 한국을 전략적인 적으로 간주하여 군사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지 않은 이상 중국이나 러시아까지 날아가는 중거리미사일의 한국 배치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나아가 정부는 미국 지도자들에게 1970년대 미·중 연합을 통해 소련을 견제한 것이 성공했듯이 현재처럼 양 대국을 적대시해 오히려 중·러 연합을 강화시키는 것이 상책이 아님을 설명하고, 하나를 택하면 결국 현 상황에서 미국의 주 경쟁국은 중국이므로 오히려 러시아와는 협력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런 맥락에서 남·북·러 경협을 지원해 북핵 해결의 동력을 마련하고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도 도모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설득해야 한다.[99]

4. 대중정책

중국은 무역과 투자의 제1 상대국이자[100] 북한문제 해결과 한반도

[99] Thomas Graham, "Let Russia Be Russia," *Foreign Affairs*, 98-6 (Nov./Dec. 2019), pp. 134-146 참조.

[100]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경제의 중국의존도가 더 높아지고 있다. 특히 2019년 1월에서 7월 사이와 2020년 같은 기간을 비교할 때 대중국 수출(24.3% → 25.8%)과 중국인의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3.0% → 11.2%)가 전체수출과 외국인직접투자(FDI)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 『경향신문』, 2020년 9월 4일.

평화 유지 및 평화통일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 발전과 호혜적인 협력을 도모하는 동시에 중국의 초강대국 부상에 대비하는 낮은 수준의 헤징을 동시 병행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현명하다. 일본, 호주, 인도 등이 강한 헤징을 추구하고 있으면서도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지속하는 것은 한국도 협력과 헤징 양면을 적절하게 추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101]

중국과는 2017년 10월 31일 한·중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양측이 미국과 관련해 약속한 사드 추가 배치 금지, 한국의 MD 비편입, 한·미·일 동맹 불가 등 3원칙을 지켜야 한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방문해 2017년 12월 14일 시진핑 국가주석과 가진 세 번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합의한 4가지 원칙도 지켜야 한다. 4대 원칙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고,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며, 비핵화 등 모든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할 뿐 아니라 남북한 관계 개선은 궁극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지지한다는 것이다.

물론 정부는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으로부터 "역사적으로 남북한은 사실 중국의 일부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힌 것과 중국의 이어도 관할권 주장,[102] 중국 항공기의 빈번한 KADIZ 침범, 한반

101) 최우선, "한국의 대중 전략: 협력과 헤징," 『주요국제문제분석』, 2019-51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19년 12월), p. 13. 호주의 공식적인 국가전략은 일종의 헤징 전략으로 '미국과 동맹을 강화하면서 중국과 경제관계를 확대하는 것'이다. 2018년 호주의 총수출에서 중국이 31.1%를 차지하는 등 중국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지만, 중국에 일방적으로 굴복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호주의 기본 입장은 '미국을 완전히 믿지는 않으면서 중국에는 당당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의 국가전략에 상당한 함의를 준다. 호주가 주는 세 가지 충고는 강대국으로부터 최대한 자율성을 확보하고 미국을 신뢰하되 자주국방력을 강화하며 중국과의 교역은 확대하면서 수출 다변화를 모색하라는 것이다. 이석수, "미·중경쟁과 중간국가의 '생존전략' ① 호주 '미국을 완전히 믿지 않으며 중국엔 당당하다'" 『주간 인사이트』 (여시재, 2019년 7월 31일).

102) 한국이 2003년에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를 완공해 장기간 운영하고 있지만, 중국은 2013년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할 때 이어도 상공을 포함하는 등 이어도 수역의 한국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향후 중국과의 배타적경제수역 경계획정 협상

도 일부에 대한 중화 패권주의의 영토적 야심 등 중국의 도발적 행태에 대해서는 항상 예의 주시하고, 우리의 영토나 주권을 위협하거나 침해할 경우에는 반드시 건별로 강력히 항의하면서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 부득이 한미동맹의 지역 안보 동맹으로의 성격 변화도 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이 2개 항모전단을 한반도 인근 7함대 작전구역에 배치한 2020년 6월 21일 중국 해군은 미사일호위함을 한반도 인근에 배치했고, 다음날 중국 정찰기가 KADIZ와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에 잇따라 진입했다.[103] 즉 미·중간 군사 갈등 상황에서 중국이 한국을 시험삼아 건드리곤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때마다 지체없이 또 단호하게 항의를 제기해야 한다.

5. 대러정책

박근혜 정부가 채택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한국과 러시아가 북한도 참여하는 사업을 추진해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인도하고 북한의 비핵화도 촉진한다는 것이었는데,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강화되자 남북·러 협력은 물론이고 아예 한·러 경제협력마저 소홀히 하였다고 평가된다.

이런 문제의식 하에 문재인 정부는 "극동을 환태평양시대를 주도하는 역동의 협력 플랫폼"이라고 지칭하면서 신북방정책을 선언한 뒤, 먼저 한·러 협력을 강화해 호혜적인 이익을 증진하고 이를 지켜본 북한이 남·북·러 3자 경협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중장기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모두가 이익을 보는 경제협력을 통해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면서 북핵문제도 해결하겠다는 건설적이

을 주도면밀하게 준비하여 대응해야 할 것이다. 강병철, "한·중간 이어도 쟁점의 본질과 중국의 전략적 속내," 『KIMS Periscope』, 제183호 (2020년 1월 21일).

103) 『조선일보』, 2020년 6월 25일.

고 창의적인 비전으로서 푸틴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으며 한·러 및 남·북·러, 남·북·중·러 경협이 진흥될 중요한 행동 지침을 구축했다. 또 2017년 9월 블라디보스토크 3차 동방경제포럼에서 문 대통령은 한·러 경협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가스, 철도, 항만 인프라, 전력, 북극해 항로, 조선,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농업, 수산업 등 '한·러 9개 다리(9 Bridges)' 사업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협력을 추진하고[104] 러시아 및 몽골과 협력해 동북아 에너지공동체를 형성하자고 제안해 협력 의지를 과시하고 정책 실현 가능성을 제고했다.

따라서 한국과 러시아는 북한을 참여시키려 노력을 지속하면서 양측간의 호혜적인 다양한 경협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매년 가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되는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6. 동아시아정책

현재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과의 협력을 상정하는 지역은 동남아지역이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는 미국 및 아세안과의 경제 협력과 공동번영을 위해 주력하되 중국과의 갈등은 회피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 문재인 정부의 또 다른 주력정책인 신북방정책은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및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과의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북한 지역의 철도 건설 및 현대화를 추진해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연결하고 러시아 극동 및 시베리아 가스를 한국과 일본까지 공급하는 가스관 건설 사업을 추진하며 두만강유역광역개발사업(GTI) 등을 추진하기 위해 러시아 및 중국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사업이

104) 상기 9개 중점분야에 교육·보건의료·환경 등 3개 분야가 추가되었다.

성사되고 추진되려면 유엔안보리와 미국의 대북 제재가 완화되고 해제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북한의 비핵화가 상당 수준 진척되어야 하므로 한국과 러시아 및 중국은 북핵문제 해결이 조속히 진척되도록 다같이 최대한 협력해야 할 것이다.

또 정부는 중국과의 교역 및 경제협력 기조를 유지·강화하고 북핵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안보를 위해 협력을 증진하는 동시에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체제 구축에 상당한 관심과 열의를 갖고 있는 러시아와 한·러 교역·투자 및 남·북·러 경협 진흥과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구축 양면에서 호혜적인 협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특히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구축은 한국과 러시아가 전략적인 주요 목표로 공동으로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은 현재 미국과 동맹관계이고 미국이 이의 추진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이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반면에 러시아는 이미 소련 고르바초프 서기장 시절부터 적극적으로 이를 제창해왔다. 따라서 한·러 양국이 구상 단계부터 협력을 도모하면서 러시아가 이를 제안하고 한국이 지지 및 후원하는 방식으로 이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일본도 이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고, 중국은 과거에는 이에 상당히 부정적 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미국의 일방주의적인 동아시아 정책이 강화되자 이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따라서 한·러 양국이 협력하면서 러시아가 주도력을 발휘하고 한국이 이를 지원한다면 과거보다 성공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진다.

만약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이 공동안보와 협력안보의 기치 하에 태동한다면 역내 지속가능한 평화질서 수립뿐 아니라 21세기 미·중 갈등과 대립 상황의 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이 국제갈등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대외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

상 어렵지만, 동북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도모하는 방향으로는 얼마든지 국제질서를 주도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강병철 (2020), “한·중간 이어도 쟁점의 본질과 중국의 전략적 속내,” 『KIMS Periscope』, 제183호 (1월 21일).

강준영 (2019), “미·중 경쟁구도의 변화와 한반도 역학관계,” 『이슈와 통찰』, Vol. 12 (9월 30일).

권보람 (2020), “미 인도-태평양 전략의 지경학과 한국 안보: 요인과 정책적 함의,” 『합참』, 제83호, 2020년 봄호(4월).

김기수 (2020), 『중국 경제발전의 정치적 제약: 권력집중의 경제적 역효과에 대한 역사적 고찰』, 세종정책연구, 2020-01 (8월 28일).

_____ (2019), 『홍콩사태의 본질 : 중국 경제·정치 가치관의 충돌』, 세종정책브리프, No. 2019-14 (세종연구소, 11월 25일).

_____ (2019), “미·중 무역협상 결렬의 전략적 의미,” 『세종정책브리프』, No. 2019-08 (세종연구소, 7월 23일).

김선재, 김태호 (2020), “중국과 러시아의 해상연합(Joint Sea): 한국 해양안보에 대한 함의,” 『KIMS Periscope』, 제190호 (4월 11일).

김열수, 김경규 (2018), “트럼프 대통령의 위대한 미국 재건 전략: 힘의 절약과 비축,” 『국방연구』, 61-3 (9월).

김원식 (2020), “격화되는 미·중대결과 이념적 진영논리 경계 필요성,” 『이슈브리프』, 통권 205호 (7월 30일).

김재엽 (2018), “‘인도-태평양’ 구상 : 배경과 현황, 그리고 함의,” 『국가안보와 전략』, 18-4.

김태현 (2020), “트럼프 시대 미국의 대중국 군사전략: ‘경쟁전략’과 ‘비용부과’,” 『국가전략』, 26-2 (여름호), pp. 44-46.

서정경, 원동욱 (2019), “시진핑 시기 중국의 강대국 외교와 미·중 무역분쟁,” 25-1, 『국가전략』 (1월).

_____ (2019), “인도·태평양을 둘러싼 미·중의 포석 전개와 한국의 4대 미래 과제,” EAI 특별기획논평 시리즈 (1월).

신성호 (2018),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대응,” 『군사논단』 95.

_____ (2018), “21세기 미·중 핵 안보 딜레마의 심화 저비스의 핵억제와 안보 딜레마이론을 중심으로,” 『국가전략』 (2월).
엄구호 (2019), “헬싱키 정상회담 이후 미·러 관계 전망,” 『외교논고』 (7월).
여유경 (2019), “‘중국제조 2025’의 본질 : 중국 정치경제의 복잡성과 한국에 주는 함의,” 『KIMS Periscope』, 제 175호 (11월 1일).
우정엽 (2019), “한반도 정세와 한·미 현안 점검,”『세종정책브리프』, (세종연구소, 4월 16일).
우평균 (2018), “트럼프 집권 이후 미-러 관계와 한국의 대러정책 지향,” 『국방연구』, 61-1 (3월).
유현정 (2014), “미국의 아·태재균형정책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대응,” in 이상현 (편), 『미국의 아·태재균형정책과 한국안보』 (세종연구소, 9월).
윤대엽 (2019), “체제안전보장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 시나리오: 한미동맹과 미·중관계를 중심으로,” 『국방연구』, 62-3 (9월).
이동률 (2019), “중국 일대일로의 진화와 그 역설: 확대되는 경쟁 속 중국의 전략적 딜레마,” 『EAI 특별기획논평 시리즈』 (EAI 중국연구센터, 6월 7일).
이대우 (2019),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 『정세와 정책』 (세종연구소, 7월 2일).
_____ (2019), “트럼프 행정부의 세계전략과 한반도,” 『세종정책브리프』, No. 2019-02 (세종연구소, 2월 7일).
_____ (2018),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세종정책브리핑』, No. 2018-17 (세종연구소, 7월 26일).
이병구 (2019), “미국의 INF 조약 탈퇴 선언과 동아시아 안보의 미래,” 『국방연구』, 62-2 (6월).
이상현 (2018),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NSS) : 국제정세 및 한반도에 대한 함의,” 『국가전략』, 24-2.
_____ (2017),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전략,” in 이대우 (편), 『미국 신정부 출범과 한·미현안』, 세종정책총서 2017-9 (세종연구소, 11월).

이석수 (2019), “미·중경쟁과 중간국가의 ‘생존전략’ ① 호주 ‘미국을 완전히 믿지 않으며 중국엔 당당하다’,” 『주간 인사이트』 (여시재, 7월 31일).
이성현 (2020), “악화되는 미·중관계와 향후 중국의 대미정책 변화 전망,” 『정세와 정책』 (세종연구소, 9월).
_____ (2020), “미국의 대중국 전략: ‘경쟁적 접근’ 함의와 파장,” 『정세와 정책』 통권 328호 (세종연구소, 7월).
_____ (2020), “김정은-시진핑 시대 북중관계 정의,” 『세종논평』, 2020-07 (세종연구소, 4월 24일).
_____ (2020), “미·중 신냉전의 시작인가?,” 『세종논평』, 2020-09 (세종연구소, 5월 27일).
_____ (2019), “중국 언론이 보는 한국의 ‘북핵 중재자’ 역할: 인식과 함의,” 『세종정책브리핑』 (세종연구소, 12월 19일).
_____ (2019), “미·중 무역전쟁 ‘장기전’을 준비하는 중국,” 『정세와 정책』 No. 2019-07 (세종연구소, 7월 22일).
_____ (2019), “미·중관계의 미래와 한국의 선택,” 『외교』, 제130호 (7월).
_____ (2018), “중국의 핵무기 개발 역사와 배경, 그리고 시진핑 시대 변화하는 중국의 핵 전략 함의,” 『세종정책브리핑』 No. 2018-24 (세종연구소, 12월 19일).
이수형 (2019), “중거리핵전력(INF) 조약 폐기로 동북아 정세,” 『EAI 논평』, (국가안보전략연구원, 8월 22일).
이용욱 (2020), “미·중 국제 기축통화 전략경쟁과 한국의 대응,” EAI Special Report (8월).
이원영 (2018), “미·중 패권경쟁과 북·미 관계,” 『국가안보와 전략』, 18-4.
이장훈 (2018), “러시아가 다시 동방으로 돌아온다,” 『주간동아』, 9월 10일.
전병서 (2020), “미국의 중국 때리기는 ‘기술·금융’ 전쟁,” 『뉴스핌』, 9월 24일.
_____ (2020), “중 ‘US-Tech Free’ 전략을 주목하라,” 『아주경제』, 9월 21일.

정재흥 (2020), “미·중간 군사안보적 갈등과 중국군의 대응동향,” 2020년 제15차 정세토론회 (세종연구소, 10월 6일).
_____ (2020), “양제츠 방한의 의미와 전략적 함의,” 『세종논평』, 2020-19 (세종연구소, 8월 26일).
장세호 (2019), “중·러 정상회담(6.5) 평가,” 『이슈브리프』, 제128호 (6월 14일).
정구연 (2018), “미·중 세력전이와 미국 해양전략의 변화-회색지대갈등을 중심으로,” 『국가전략』, 24-3 (8월 30일).
정은숙 (2019), “샹그릴라 대화(Shangri-La Dialogue): 미·중갈등과 아시아안보,” 『정세와 정책』, 제9호 (6월 18일).
_____ (2019), “INF레짐의 위기와 우리의 대응,” 『세종정책브리프』, No. 2019-03 (세종연구소, 3월).
전재성 (2019), “트럼프 정부 미국 외교정책의 현황과 미국의 미래,” EAI 워킹페이퍼 (12월 5일).
정재흥 (2018),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문제에 대한 최근 중국 전문가들의 인식,” 『세종정책브리핑』, No. 2018-27 (세종연구소, 12월 27일).
_____ (2019), “중국의 강대국화 전략과 한국의 과제,” 『세종정책브리프』, No. 2019-05 (세종연구소, 4월 4일).
_____ (2020), “중국 양화와 홍콩 보안법 이후 미·중갈등 전망,” 『정세와 정책』, 통권 328호 (세종연구소, 7월).
최우선 (2019), “한국의 대중 전략: 협력과 헤징,” 『주요국제문제분석』, 2019-51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12월).
최재덕 (2019), “차이나 리스크에 대한 대비와 한반도의 전략적 지정학 정립의 필요성 -북방경제협력을 중심으로-,” 『슬라브학보』, 34-2 (6월 30일).
하영선 (2019), “‘국제정치학 석학’ 하영선이 말하는 ‘한국 외교의 길’”, 『신동아』, 11월호.
_____ (2019), “미·중 경제 19 대 14…한 쪽이 100% 완승 못해 타협 불가피,” 『중앙선데이』 (6월 22일).

하영선·신기욱 대담 (2020), "미·중 GDP 격차 좁혀져 세계질서 재편 예고… K방역 성공 자만 말아야," 『한국일보』, 5월 25일.
하영선·전재성 (2019) "인도·태평양을 둘러싼 미·중의 포석 전개와 한국의 4대 미래 과제," EAI 특별기획논평 시리즈 (6월 5일).
한용섭 (2018), "미국 러시아 중국 사이의 미사일방어(MD)와 전략적 안정성 논쟁," 『국방연구』, 61-1 (3월).
홍현익 (2011), 『미·중·러 3각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 『세종정책연구』 2011-1 (세종연구소, 1월 30일), 70 pp.
_____ (2003), 『9·11테러 이후 미·중·러 3각관계의 변화』, 세종정책연구 2003-18 (세종연구소, 10월 14일). 118 pp.

Allison Graham (2017), *Destined for war: Can America and China escape Thucydides's trap* (N.Y.: Houghton Mifflin Harcourt).
Aoyama, Rumi (2019), "Power and Motivation in China's Foreign Policy," *EAI Working Paper* (May).
Blankenship, Brian D. & Benjamin Denison (2019), "Is America Prepared for Great-power Competition?," *Survival*, 61-5 (Oct./Nov.).
Borisov, Alexander (2018), "A New World System, or a World Without a Hegemon," *I.A. A Russian Journal of Wpu,* 64-5.
Cheng, Dean (2018), "Chinese Calculations of Security and the Korean Peninsula," *Journal of East Asian Affairs,* 32-1.
Ciborek, Przemystaw (2019), "A New Alliance against the US? Sino-Russian Relations in Reponse to Trups's redefined Foreign Policy Priorities," *International Studies, Interdisciplinary Political and Cultural Journal*, 23-1.
Clinton, Hillary (2018), Clinton(Hillary)'s Speech on America's Engagement in the Asia-Pacific at Honolulu, Hawaii (October).
Colby, Elbridge A. (2020), "The Age of Great-Power Competition,"

Foreign Affairs, 99-1 (Jan./Feb.).
Cooley, Alexander and Daniel H. Nexon (2020), "How Hegemony Ends : The Unraveling of American Power," *Foreign Affairs* (July/Aug.).
Department of State (2019), *"A Free and Open Indo-Pacific Advancing a Shared Vision,"* (November).
Department of Defense (2019), *The U.S., Indo-Pacific Strategy Report: Preparedness, Partnership, and Promoting a Networked Region,* June 1.
_____ (2007), *A Cooperative Strategy for 21st Century Seapower* (October).
_____ (2018), *Summary of the 2018 National Defense Strategy*, (January).
Graham, Thomas (2019), "Let Russia Be Russia," *Foreign Affairs*, 98-6 (Nov./Dec.).
Gulasaryan, Artur (2018), "Unilateral U.S. Sanctions Against Russia: The Viewpoint of International Law," *I.A. Russian Journal of World Politics*, 64-6.
Kang, Chae-Yeon (2019), "Between Pyongyang, Beijing, Moscow, and Kim Jong Un, *Global North Korea*, EAI (June 26).
Kaushiki, Nishitha and Hilal Ramzan (2019), "Unfolding of the New US-Russia Hostility and Washington's Self-Entrapment: An Analysis," *The IUP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13-4.
Kelly, Robert E. (2019), "U.S.-South Korea Alliance: 5 Reasons America Should Be Thankful For It," *The National Interest* (Nov. 28).
Klare, Michael (2018), "The Pentagon Is Planning a Three-Front 'long War' Against China and Russia, *Foreign Policy in Focus* (Apr. 4).
Korolev, Alexander (2019), "On the Verge of an Alliance:

Contemporary China-Russia Military Cooperation," *Asian Security*, 15-3.

Kurata, Hideya (2019), "Korean peace building and Sino-US relations: an "Ad-hoc" concert of interests?," *Journal of Contemporary East Asia Studies,* 8-1.

Lee, Hsien Loong (2020), "The Endangered Asian Century: America, China, and the Perils of Confrontation," *Foreign Affairs* (July/Aug.).

Lee, Seong-hyon (2018), "U.S.-China Conflict and the 'New' International Order – From 'G-2' to 'G-Zero' World?," *Foreign Relations*, 20-1 (Korea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Dec.).

Lei, Y., Sui, S. (2019), "China-Russia military cooperation in the context of Sino-Russian strategic partnership," *Asia Europe Journal*, (July).

Liu, Ying (2018), "Strategic Partnership or Alliance? Sino-Russian Relations from a Constructivist Perspective," *Asian Perspective*, 42.

Lukin, Alexander & Anatoly Torkunov (2020), "Trump's Policies and the Sino-Russian Entente," *Survival,* 62-2 (April-May).

Lukin, Artyom (2018), "Russia and the United States in the Asia Pacific: A Perspective of the English School," *Asian Perspective*, 42.

Luzyanin, Sergei G. (2020), "The Present and Future of Russia-China Relations," *Herald of the Russian Academy of Science*, 90-1.

Mania, M. Pugacewicz, T. (2019), "Confronting the International Order: Changes in the US Foreign Policy from the Perspective of American Power Elites," *International Studies, Interdisciplinary Political and Cultural Journal*, 23-1.

Mastro, Oriana Skylar (2019), "In the Shadow of the Thucydides Trap: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nd the Prospects for Peace in U.S.—China Relations," *Journal of Chinese Political Science*, Vol. 24.

Mearsheimer, John (2010), "The gathering storm: China's challenge to US power in Asia," *The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 3-4, pp. 381-396.

Monks, Dylan (2019), "China/Russia 2035," *Comparative Strategy*, 38-4.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2018), *Nuclear Posture Review,* February.

_____ (2019), *Annual Report to Congress :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9*, (May 2).

Ohm, Tae-am (2018), "Security Challenges for South Korea and the Future of the ROK-U.S. Alliance," *The Korean International Journal of Defense analysis,* 30-3.

Roh, Kyung Deok (2019), "Different Versions of Romance: Recent Studies on Sino-Russian Relations," *Journal of Chinese Political Science* (January).

Shih, C. Huang, C. (2019), "Competing for a Better Role Relation: International Relations, Sino-US Rivalry and Game of Weiqi," *Journal of Chinese Political Science* (November).

Streltsov, Dmitry (2018), "The Indo-Pacific Region: A New Reality in the Global System of International Relations," *I.A. Russian Journal of World Politics*, 64-6.

The White House (2020), *United States Strategic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May).

Trump, Donald (2019), *The State of Union Address*, February 5.

Wishnick, Elizabeth (2018), "The Sino-Russian Partnership and the

East Asian Order," *Asian Perspective*, 42.
Wong, Alex N. (2018), (Deputy Assistant Secretary, Bureau of East and Pacific Affairs), "Briefing on The Indo-Pacific Strategy," (April 2).
Xue, Ma (2018) "US Financial Sanctions on Russia: Do They Work?," *CIR* (October).
Yujun, Feng et al. (2019), "The Belt and Road Initiatives: Views from Washington, Moscow, and Beijing," *Papers*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Apr. 8).
Zhaoyu, Huang (2018), "The Risk in Sino-US Relations IS Not about Trade Frictions but about Military Adventures," *China Academic Journal* (Nov./Dec.).
Zhong, Feiteng (2019), "Rising China, Developmental Security and the Emerging Order in the Asia-Pacific," *EAI Working Paper* (April).